

SGRA REPORT

SGRAレポート No. 95

No. 95

ISSN 1346-0382

第19回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岐路に立つ日韓関係： これからどうすればいいか

한국어 버전

제 19 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

기로에 선 한일관계 :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19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

기रो에 선 한일관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포럼의 취지

과거사, 경제, 안보문제가 연계된 복합방정식을 현명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한일관계가 파국을 면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 지 오래다. 한일 상호의 피로감도 한계에 달했고, 한일관계의 복원력 저하, 한미일 삼각관계의 균열 조짐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일본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정부는 일본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한국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좀처럼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양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한일관계 연구자들에게는 무엇이 가능한가? 본 포럼에서는 한일관계의 전문가를 한일 각각 4명씩 초청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한일의 기초보고를 토대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SGRA는

SGRA(세그라)는 세계 각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오랜 유학생생활을 거쳐 일본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일과 외국인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개인이나 조직이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나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연구 또는 문제해결의 제안을 하고 그 성과를 포럼, 레포트, 홈페이지 등의 방식으로 널리 사회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연구 테마별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가 연구팀을 편성하고 광범위한 지혜와 네트워크를 결집시켜 다면적인 데이터로 분석하고 고찰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SGRA는 어떤 일정한 전문가가 아니라 널리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포괄한 국제적이고 학제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지구시민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SGRA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GRA 소식

SGRA 포럼 등의 공지와 세계각지의 SGRA 회원이 에세이를 매주 목요일에 전자메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은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entry/registration_form/) 에 서 자동등록 하시면 됩니다.

기रो에 선 한일관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 시 2021년 5월 29일 (토) 14:00~16:20
방 법 Zoom Webinar 형식으로 개최
언 어 한국어·일본어 (동시통역)
주 최 (공재) 아쓰미국제교류재단세키구치글로벌연구원 [SGRA] (일본)
공 최 (재) 미래인력연구원 (한국)
사 회 김웅희 (인하대학교 교수)
일 시 이마니시 준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상무이사·SGRA 대표)
일 시 서재진 (미래인력연구원 원장)

제 1부	강연과 코멘트	
[강연 1]	기रो에 선 한일관계: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일본의 입장에서	62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코멘트 1]	오코노기 선생님 강연을 듣고	74
	심규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강연 2]	기रो에 선 한일관계: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한국의 입장에서	76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	
[코멘트 2]	이원덕 선생님 강연을 듣고	83
	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제 2부	자유토론	87
	토론자 김지영 (한양대학교 부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교수)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제 3부	질의응답	100
	진행 김승배 (충남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어↔일본어 이혜리 (한국외대) 안영희 (한국외대)

후기를 대신하여 108
 김웅희 (인하대학교 교수)

참가자 약력 111

【환영인사】 시작하며

이마니시 준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발언은 일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상무이사,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마니시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한일미래포럼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은 19회입니다. 작년은 코로나로 개최 못해, 올해로 이 프로젝트도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도쿄도 분쿄구 세키구치에서 글로벌을 향해 발신하자는 의미로 이름 붙인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SGRA라고 합니다만, 창립하고 바로 뒤 오늘 사회를 맡으신 김웅희 선생님을 통해 한국 미래인력연구원 이진규 선생님께서도 함께 연구교류사업을 하자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의 첫 해외거점프로젝트가 됐습니다.

1회인 2001년 10월 서울 교외 양평에 있는 미래재단 교류관에서, 미래재단과 아쓰미재단의 신진 연구자가 모여 세미나를 개최한 뒤, 삼겹살과 이원덕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폭탄주 교류모임으로 처음부터 굉장히 끈끈한 교류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뒤 매년 교대로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며 때로는 꺾이나 호주까지 가고,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최악의 한일관계와 관계없이 순조롭게 연구교류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오키노기 선생님을 모셔 한일 연구자로 연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지만 코로나로 연기됐습니다. 한편으로 SGRA에선 작년 6월쯤부터 모든 포럼을 온라인 혹은 이곳을 발표장소로 온라인과 결합시키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 마이크, 카메라 등 매회 고민해가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가자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포럼이 됐으면 합니다.

온라인 덕에 동시통역을 부탁드리기 수월해져, 지금까지 할 수 없던 언어와 공간을 넘어 세계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한일아시아미래포럼 최다인 100명이 넘는 참가등록을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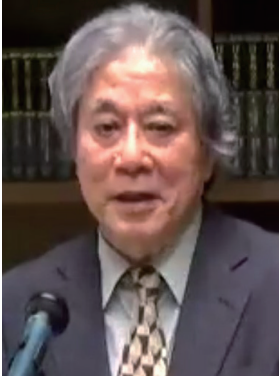
다만 온라인 회의를 집중해 듣기 위해 전체를 2시간 20분으로 끝내는, 약간

타이트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선생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Zoom의 Q&A 기능으로 질문과 코멘트를 받고자 합니다
다만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부 포럼내에서 다루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
기 바랍니다. 해주신 질문과 코멘트는 후일 강사와 토론 선생님께 보내도록 하
겠습니다.

그럼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김웅희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강연 1



기रो에 선 한일관계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일본의 입장에서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발언은 일본어]

[요지]

아이덴티티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일역사마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과 사죄와 반성이 결여된 국교정상화에 있다. 일본인은 그러한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국인의 분노는 무라야마 담화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에도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역사비판은 중국의 경제대국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또한, 한국 사법부의 적극적인 정치개입이 역사마찰을 확대시켜 그 해결을 더욱 곤란하게 했다. 한편, 그것에 대항하여 보수적인 역사관을 가진 아베 수상이 역사마찰과 대한무역관리를 연계했다. 향후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한일관계를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에 대해 한국인의 자신감이 강화되었다. 선진적인 정보기술의 보급,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융성, 1인당 GDP와 국방비의 상승 등이 그러한 판단을 위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의 탄생과 한일의 세대교체가 상호관계의 불행한 역사의 청산을 촉진할 것이다. 바이든 정권의 출범은 새로운 국제시스템의 변동을 예감하게 한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자로 인정하고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단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 양국은 미중 대립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으며,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들파워이다. 전략공유가 정착된다면, 그것이 한일의 상호 이미지를 개선하고, 광범위한 인식공유를 선도할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재확인이 당면의 목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사전에 배부한 자료에 전부 쓰여 있습니다(P68-73자료 참조). 일본과 한국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조금 구조적이고 역사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1. 한국병합이라는 화근: 왜 역사마찰은 끝나지 않는가

한일간 역사마찰이라는 건 요약하자면 쌍방의 ‘정체성의 충돌’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아시는 대로 언어, 문화, 역사, 종교, 그 밖의 다른 것에 의한 자기인식 (자신은 누구인가? / 자화상)입니다. 일본어로는 적당한 번역어가 없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라 합니다만, 한국어로는 ‘정체성(正体性)’ 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자기인식이기에 이는 타인이 그걸 인정함으로써 안정적이 됩니다. 즉 ‘승인 욕망’ 을 항상 동반하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으면 안심하게 되죠. 그러니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하는 대로, 정체성 정치라는 건 이해나 이지(理智)의 정치가 아닌 ‘존엄의 정치’ 입니다. 존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것이 ‘분노의 정치’ 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본인과 한국인은 정말로 역사적 사실을 둘러싸고 다투온 것인가,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 역사적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다투온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정체성 정치’ 의 관점에서 보면 한일관계의 최대 화근은 상당히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러일전쟁후 일본의 한국 병합입니다. 결국 모든 건 이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호정치’ 에는 부분적이라도 조선의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조선의 관계에도 사대주의나 종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합정치’ 에는 영토확대와 정체성의 박탈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본이 당시 정책으로서 역시 영국 모델, 즉 대륙에 대한 ‘불개입’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조선지배가 있었더라도 그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도 있으니 이를 후방에서 지원하면 됐던 겁니다. 이게 장기에 걸친 한일우호를 보증했을 겁니다.

한국인은 메이지시대 일본인이 계획적으로 대륙에 침략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일본인이 갖고 있던 지정학적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병합정치’ 가 있던 건 아닙니다. 한국인의 자화상은 ‘일본이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반도에 침략해왔다’, ‘큰 희생을 치르면서 그에 대해 용감히 싸웠다’ 라는 겁니다. ‘의병투쟁이 그랬지 않은가, 3.1운동이 그랬지 않은가, 상하이에 수립된 임시정부도 그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피해자 내셔널리즘’ 이니 일본의 통치가 가혹하면 할수록 한국인의 투쟁은 영웅적이었던 것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한일 정체성이 충돌해 상대방의 역사적 존엄을 부정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냉전하의 국교정상화: 1965년 체제

35년간의 식민지 통치 뒤, 약 20년간 공백을 거쳐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달성됐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그 밖의 협정

이 체결됐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을 때 자주 학생들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일본 통치에서 해방됐으나 그 뒤 20년이나 되는 사이 한일간에는 국교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거의 이해 불가능한 일인 듯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격렬하게 감정적으로 충돌한 시대가 실제 존재했습니다. 장기에 걸친 격론 뒤 드디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커다란 마찰이나 고통, 논쟁을 수반했습니다. 최대 장애는 한국병합조약을 포함한 과거 조약과 협정이 유효했는지, 무효했는지라는 개념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정체성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한일 협상자는 거기에 자신들의 역사적인 존엄을 걸었다고 하겠습니까. 한국측은 당초부터 “불법이고 무효였다”, 즉 “일본의 한국통치는 무력침략에 다름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측은 “국가병합이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으니 한국통치는 정당했다”고 반론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논의와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합의가 성립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조약문에 있는 대로 한일 외교당국은 그것이 ‘이미 무효’라는 걸 확인하고 언제부터 무효인지를 애매하게 했습니다. 혹은 각각의 해석을 허용하는 듯한 문언으로 했다고 해도 좋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2중해석’을 허용한 겁니다.

한 가지 중요했던 게 재산·청구권 상호포기와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권협정’이라 불리는 건, 정식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財産および請求權に関する問題の解決ならびに經濟協力に関する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協定)’이라고 합니다. 그 요점은 한일이 재한·재일재산과 각각의 청구권을 상호포기하고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재산·청구권 상호포기와 경제협력은 관계없다고 설명됐으나 하나의 협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묘한 조약·협정체제, 즉, ‘<이미 무효>+재산·청구권의 상호포기+경제협력’이 이른바 ‘65년체제’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한국의 경우, 당시 제2차 및 제3차 경제5개년계획을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장군에게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북한 공산주의에 싸워 이기는 길이었던 겁니다. 한편 그에 따라 일본은 사죄가 없는 국교정상화를 실현했습니다. 역사적인 존엄을 지키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다만 당시에 한국국민, 특히 야당, 학생, 언론계(신문)는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국교정상화는 굴욕외교로서 강한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박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조약을 체결한 뒤, 위수령으로 대학가를 봉쇄하고 비준해야만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일국교정상화는 한국내에서 국민적 지지가 결여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되면서 ‘65년체제’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확산시킵니다. 한국의 민주화와 냉전종식 후, 한국 내에서 한일조약개정이나 재교섭 요구가 대두되고 그게 한일역사마찰 원인이 됐습니다.

3. 단명한 1998년 체제 ~ 아베 정권의 반격 / 65년체제의 사수

물론 냉전종식 뒤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 공조나 역사화해의 조류가 있었습니다. 독일 통일 외에 유럽에선 역사화해와 경제통합이 진전됐습니다. 이를 동력으로 한일간에서도 화해와 협력을 향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93년의 고노담화(위안부문제), 1995년의 무라야마담화(전후50년), 그리고 1998년의 오부치 게이조·김대중에 의한 한일 ‘파트너십공동선언’입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과의 공동선언에서 일본측 오부치 수상은 다시금 반성과 사죄의 말을 명확히 표명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쌍방은 21세기를 향해 화해와 선의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98년 체제’라 불리는 게 이것입니다. 역사화해의 형식이 갖춰졌으니 이는 큰 전진이었습니다.

저는 ‘98년 체제’를 ‘65년 체제’의 ‘정치적 수정 내지는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수정이 있던 건 아니지만, 65년 체제가 정치적으로 수정·보완됐습니다. 즉, ‘65년 체제’에 더해 일본측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명확하게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문제, 원폭피해자, 사할린잔류한국인문제 등에 관해 인도적인 구제조치를 취한다는 틀, 이게 ‘98년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8년 체제’는 한일 사이에 일시적이거나 대단히 양호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전후 한일관계가 가장 원활했던 게 이 시기일 겁니다. 이 체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엔 아쉬운 일입니다만 한국측은 이 방식, 즉 ‘98년 체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권을 지탱한 건, 한일조약체결에 반대하고 그 뒤 한국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진보세력이었습니다. 2002년에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수상이 북일국교정상화에 힘을 쏟을 동안은 관참했습니다만 2005년에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때부터 ‘65년 체제’와 ‘98년 체제’를 정면에서 비판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역류상황이 발생한 셈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도 이와 같은 진보정권의 특징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이명박 정권 후반기부터 한국 사법의 정치개입이 시작됐습니다. 한일조약체결당시의 합법·불법논쟁이 사법을 통해 재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정권에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며 사법의 개입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2015년말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였습니다.

따라서 아베 수상은 문재인 정권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합의를 유명무실화한 데 대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엄격화조치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베 정권에게 이는 ‘65년 체제’와 ‘98년 체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겁니다.

이 같은 배경을 보자면 최근의 한일관계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간단히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65년 체제’와 ‘98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

니다. 오늘 이원덕 선생님이 발표하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 저희들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일관계가 개선될 전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전경련이 위탁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측, 한국측 모두 국민 차원에서는 양국정부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측은 64.7%, 한국측은 더 많은 78.0%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뭔가 하지 않으면 어렵다’ 라 하고 있는 겁니다.

4. 새로운 시대의 한일관계 : 그 윤곽

지금부터의 ‘한일관계의 윤곽’ 같은 걸 생각해보면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첫번째가 한일간의 대등한 경쟁관계입니다. 최근 한국은 선진적인 IT 기술이나 엔터테인먼트산업, 혹은 1인당 GDP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일본을 넘어선 건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에서 한국인이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많은 일본인, 특히 젊은 세대의 일본인은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승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약하자면 장래에는 한국내에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돼, 그게 한일관계의 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돼도 이상할 건 없다는 얘깁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경쟁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좋은 라이벌이 좋은 친구’ 라는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는 국제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이는 이미 논의되고 있는 대로 저도 바이트 정권의 출범이 국제시스템 변동을 예고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냉전까지는 아니라 해도 미국과 중국의 격렬한 체제 경쟁이 장기화할 겁니다. 미국은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중냉전은 아닙니다만, 한미일 및 한일의 협력이 강하게 요청되는 듯한 국제환경이 지금 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번째 요소입니다. 북미간에 비핵화 교섭이 실현돼도 한미일 및 한일 협조가 필요해지는 건 변함없습니다.

세번째로 그와 같은 환경하에서 한일이 전략을 공유한다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일본과 한국, 어느 쪽도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미들 파워입니다. 자국 중심의 대국의식을 갖지 않았으니 일종의 전략이해 공유가 가능합니다. 역사마찰을 조정할 수 있다면 실은 전략적 이익 공유가 가능하고, 장기적 전략 공유가 역사마찰 축소를 가능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길게 얘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일관계 재출발의 토대가 되는 건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의 균형’ 이라 할까요, 이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균형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65년체제’ 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를 이념적으로 부정해버리면 한일관계의 현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98년체제’ 와 같은 것이 재출발의 토대가 돼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미간에 비핵화교섭이 개시되고 제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일간에도 대북경제지원과 같이 한일협력의 새로운 형태가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이

는 아직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98년체제’에 대해 얘기할 때 저는 북일평화선언도 언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은 한일간의 ‘98년체제’가 북일관계에 적용된 게 평양선언입니다. 일본은 이 선언에서 북한에 대해 명확하게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국교정상화 뒤의 경제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여하튼 오늘 포럼의 주제인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간단하게 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고, 아마도 현재의 두 정권 사이에선 회복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는 건 한일쌍방에 큰 실패이자 국민에게도 큰 재난이니, 새로운 화근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오늘 세미나의 목적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로에 선 한일 관계

발표자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한일 강제 병합이라는 화근—왜 역사적 갈등(마찰)은 끝나지 않는가?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은 양측의 '정체성 충돌'이다. 정체성이란 언어, 문화, 종교, 역사, 민족성(ethnicity) 등에 의한 자기인식(나는 누구인가? /자화상)이며, 타자에게 승인 받음으로써 안정된다(승인욕구를 동반함). 따라서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Yoshihiro Fukuyama)가 말하듯 '정체성 정치(The politics of identity)'란 이해(利害)와 이성의 정치가 아니라 '존엄의 정치'("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이며, 이것을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분노의 정치'이다. 또한 앤서니 데이비드 스티븐 스미스(Anthony David Stephen Smith)가 지적하듯이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확립은 민족주의(Nationalism) 운동의 중심적 목표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인과 한국인은 진정으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투쟁해온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것보다도 자신의 역사적인 자화상을 지키기 위해 즉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것은 아닐까?

어찌 되었건 '정체성 정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근대 한일관계의 최대 화근(실패)은 러일전쟁 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것이다. '보호'정치에는 정체성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병합'정치는 정체성을 박탈하는 것밖에 없었다. 여기서 양측의 근대적인 자화상을 확인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일본인의 자화상 / 보신 전쟁 (戊辰戰爭), 메이지 유신 그리고 세이난 전쟁 등을 거쳐 국민국가의 형성과 근대화에 성공하고, 청일, 러일전쟁에 승리하여 아시아의 맹주가 되었다/ 그 배경에 지정학적인 불안
 - *청불 전쟁(1884년)이후 중국이 조선을 열강에게 뺏길 것을 우려→일본의 보호국으로 / 청일전쟁, 러일전쟁
 - *아베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는 러일전쟁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한일병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한국인의 자화상 / 일본의 계획적인 침략의 희생물이 되어 가혹한 지배에 용감하게 저항하여 독립을 이뤄냈다—의병투쟁, 3.1 운동, 상하이 임시정부, 만주무장투쟁(봉오동 전투) 등
 - *피해자 민족주의 / 일제강점기가 가혹할수록 한국인의 저항은 영웅적인 것이 된다.
 -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문제는 식민지통치보다도 중일·태평양전쟁 당시의 전시동원이었다.
- 한일병합조약(1910.8.22) / 한국 황제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여한다"
 - *배경에 청일전쟁 후의 외교실패 / 삼국간섭, 명성황후 시해 사건(1895), 아관파천(1896)→러시아의 위협 확대
 - 러청밀약 (동청철도), 여순과 대련의 조차(租借)권 획득, 남부지선 시설권(1898), 의화단사건→러일전쟁(1904~05)
 - *한일 병합은 "이상한 식민지화" (미타니) / 가산제국가론(Patrimonial State)의 이웃나라의 병합, 야마가타(山縣)들의 무단주의(무력을 행사하여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 메이지 일본의 정책으로서는 영국모델, 즉 대륙에 대한 '불개입'정책 (해군건설 + 한정적인 한국 지원) 이 옳았다 / 한국인의 러시아에 대한 저항을 후방에서 지원한다
 - *러일전쟁에서 획득한 러시아권역(관동주, 남만주철도)이 국책을 잘못하게 했다→만주사변
- 역사적인 사실의 규명이 반드시 '존엄의 존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일역사공동연구(제 1 차)는 인식일치가 아니라 학문과 정치를 분리하기 위한 시도였다→실패 / 논쟁의 마당

냉전 하에서의 국교정상화—1965년 체제

해방 후 20년 동안 한일 간에는 국교가 존재하지 않았다(심한 감정의 충돌)/ 전쟁이 끝난 후 6년 간의 공백과 14년 간에 걸친 곤란한 교섭(1951.10~65.6)을 거쳐 1965년 12월에 한일은 35년 간의 일본의 한국통치를 법률적으로 청산하고

국가관계를 정상화했다. 새로운 조약체제는 주요문서만 해도 기본관계조약,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 어업,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화재 인도협정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의 어디에도, 일본 측의 사죄표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냉전 하에서의 한일국교정상화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한일의 안보에는 공헌했으나, 정체성 정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죄가 없는 국교정상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장차 화근을 남기게 되었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 1951.9.8

- 제 2 조 / 일본은 “코리아의 독립을 인정하고...모든 권리, 자격 및 청구권을 포기”
- 제 4 조 / 이들 지역의 ‘청구권’은 (해당국 간에) 특별협정으로 다룬다

< 제 1 차 ~ 제 7 차 한일회담 >

- 제 1 차 본회담 1952.2.15-4.25 / 한국통치에 관한 거대한 인식의 차이→구조약의 유효성 논란
 - *한) 병합조약은 ‘무효’ / 원천적 무효였다는 ‘강한 신념/국민감정’(유진오), 대일 청구권 8 개 항목 제시(조선은행을 통해 반출해 간 지금(地金),지은(地銀)의 반환청구,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등)
 - *일) 병합조약은 ‘합법’ / “국가의 병합은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다”→미군정부의 관리재산처분 후에도 , 일본측의 사유재산청구권은 존중한다(역청산권)
 - *미) “한국에 있는 일본재산은 소멸되었으나, 그 사실은 재일한국재산의 처리와 관련된다”(구상서 52.4)
- 제 3 차 회담 53.10-청구권위원회에서의 구보타(久保田: 수석대표)발언 10.15 / “대한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총독부 정치는 좋은 면도 있었다”(예를 들어 식림,철도,항만,농) “카이로 선언은 전쟁 중 흥분상태로 쓰여진 것이었다”→장기 (5 년반) 중단과 일본어선나포
 - *구시대적 감각 / 일본국내를 개발하는 느낌→죄책감 없음 (오히려 선의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함) →식민지 근대화 논란

- 제 5 차 회담(60.10) / 4.19 혁명 후 장면내각에게 경제협력방식(청구권의 상호포기)를 시사
- 제 6 차 회담(61.10) / 쿠데타 후 이케다 · 박정희 회담 61.11→경제협력의 규모에 관심
 - 오히라 · 김중필 회담(62.10~11) / 무상공여 3 억 달러, 정부차관 2 억 달러, 민간차관 1 억 달러 이상→민정이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63.10-11) 을 위해 약 1 년간 교섭중단 / 재개(64 년 3 월)
 - 한국 내에서 반대투쟁의 고양 / 비상계엄령 64.6→6.3 세대
- 제 7 차 회담 64.12- / 시이나 방한, 기본조약에 가조인 65.2→조약 · 여러 협정 조인 65.6

< 기본관계 >

- 구조약은 ‘무효’→언제부터 무효인가? / ‘이제는 무효(원천적 무효)’ = 이중해석에 합의
- “유감과 반성” / 시이나 외무상의 한국도착성명 65.2→“양국 간의 오랜 역사 중에서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서 깊이 반성하는 바이다” / 이동원 외무장관과의 공동성명에서도 반복함

< 청구권 >

- 청구권 협정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65.6.22
 - 제 1 조 / 경제협력→3 억 달러의 무상공여, 2 억 달러의 저이자 대출, 10 년 분할로 제공
 - 제 2 조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 제 2 조 3 항 / “같은 날(1945.8.15) 이전에 생긴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의 의미 / “한일이 국가로서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야나이 슌지 (외무성 조약국장 : 柳井俊二) 답변 91.8

< 경제협력 >

- 시이나 / “청구권과 경제협력협정은 완전히 별개의 것”→“한국의 독립에 대한 축하금이다”

*제 1 조 부기 / "공여 및 대출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 경제협력은 인프라 · 공업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 발전용 댐, 고속도로, 제철소 등
 - '한강의 기적' / 3 요소 + ①수출지향적 발전전략 + ②청구권 자금 + ③베트남 특수

제 2-3 차 5 개년경제계획(67-76) → 중화학공업화 선언 73.1

* 「대일 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 74.12 → 무상공여의 3.6% (약 95 억원) 을 지불 / 일본측은 묵인 (청구권의 상호포기) → JP 의 회상

*한일회담 공문서 공개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 05.8 / 「무상 3 억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 65 년 체제란 무엇인가 >

- ①구조약의 '이제는 무효' + ②청구권의 상호포기와 경제협력에 의한 관계정상화
- ①경제발전 5 개년계획을 위한 자금조달과 ②사죄 없는 국교 정상화

*신냉전 시대에도, 경제협력방식은 "40 억달러 차관"으로 재현되었다 / 나카소네총리방한 83.1

- 한국에서의 격심한 반대운동 (학생, 야당, 신문) / 계엄령 64.6, 위수령(衛戍令) 65.8, 단독국회 날치기 통과 65.8

< 냉전 하에서의 국교정상화 >

- 타협의 배경 / ①안전보장상의 필요성, ② 한국경제발전의 필요성, ③ 미국의 강력한 요청 / 케네디 정부의 베트남 개입, ④ 군사정권의 리얼리즘 (반일 < 반공과 건설)

· 그러나 "사죄없는 정상화"는 병합조약의 합법 · 불법논쟁을 남기고, 그것이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불신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65 년 체제는 냉전종결과 한국 민주화의 충격에 견디지 못했다.

단명으로 끝난 1998 체제 — 오부치 · 김대중 공동선언

한국의 민주화와 냉전 종결이라는 충격에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에 이어 1998 년 10 월에는 김대중 · 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일본은 65 년 체제의 정치적인 수정을 단행했다. 이것이 98 년 체제라 불리는 것이며, 1998 년에서 2004 년에 걸쳐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월드컵 공동 개최, 한류 붐 등으로 이어져, 역사 화해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2002 년 9 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과 북일 평양선언에 명확하게 반영되었다. 사실 일본과 북한은 경제협력방식(청구권의 상호포기 + 경제협력)에 의한 조기 국교정상화에 합의하고,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것이다. → (조약 · 협정 + 사죄표명 + 인도적 구제 >

- 냉전 종결 (베를린 장벽 붕괴) → 유럽 / 독일통일, 전쟁화해, 유럽통합
- 일본도 "국제협조, 역사 화해" 외교로 대응 → 65 년 체제의 정치적인 수정 (not 법률적)

* 고노 담화(93.8) / 위안부 "일본군의 직간접 관여"를 인정 → "반성과 사죄" 표명

* 아시아여성기금(95 년 7 월 ~ 2007 년 3 월) / 민간이 '배상금'을 모집하고 정부가 의료 · 복지 등을 지원

* 무라야마 담화(95.8) /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반성과 사죄"를 표명 / 단, 병합조약은 유효 → "부당합법론"(이제는 무효"는 유지)

- 김대중 · 오부치 "파트너십" 공동선언 / 65 년 체제의 정치적 수정 (not 법률적)

* 오부치 총리의 "반성과 사죄" 표명을 김대중 대통령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평가한다"

* 1998 ~ 2004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월드컵 공동 개최, 한류 붐 → 역사적 화해에 대한 기대

- 고이즈미 방한 01.10 / 새로운 전몰자 추도 · 평화 기념 시설 건립 검토, 한일역사 공동연구 추진

- 노무현 정권 03.2 - / 최초의 진보 단독정권 → 고이즈미 총리 방북 02.9 과 북일 교섭을 환영

*" (역사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 04.7 → 반전 /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2005.2)-

- 진보정권의 역사관 (노무현의 삼일절 연설 05.3) / "역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은 < 진상규명

→ 사죄 · 반성 → 배상 → 화해 > 이다 → 65 년 조약과 98 년 선언 부정 / 화해 좌절

* 진보세력은 30 주년 (1995 년) 경부터 한일조약의 폐기 · 재교섭을 요구 (박원순, 강창일)

- 간 나오토총리의 '강제병합 100 년 담화' 10.8 / 3 · 1 독립운동에 대해 언급하며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들의 "뜻에 반했다"는 것을 인정 / 센고쿠(仙谷) 주도

한국 사법의 정치개입—법률주의와 도덕주의의 도전

전통적인 정치문화의 부활? / 유교적인 정치감시 전통? (도덕주의 / 도덕의 강제)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 민주화에 의한 부활? → 사법 적극주의로 변신 /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서 행정부를 구속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은 외교적 합의 (「이제는 무효」) 의 파기명령→65년, 98년체제 거절

*일본 근세의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와는 대조적 / 「싸움을 하면 둘 다 벌함」 (비이념적인 분쟁 처리)

▼이명박 대통령 (2008년 2월 ~ 13년 2월) / 사업가출신이며 반일은 아니었다①헌법재판소·대법원 판결,② 후반기의 스캔들→일본 비판

2011.8 헌법재판소, 위안부 문제에서 외교통상부의 「부작위」 / 외교보호의무를 인정

12 이명박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위안부 문제로 격론 (교토)

2012.5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도 외교보호권도 소멸하지 않았다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 일본의 판결은 "한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한다"

7 파기환송심 / 서울 · 부산고법, 신일철주금 · 미쓰비시중공에 배상명령→상고

8 이명박 대통령 독도 상륙 / 일왕 방한에 대한 발언도

▼박근혜 대통령 (2013년 2월 ~ 17년 3월) / 외교에 의한 해결 모색→재판에 제동을 걸면서, 대일역사비판을 전개

2015.12 위안부문제에서 합의 (「화해치유」재단 설립) / 일부 위안부 소송 16.1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 / 사법권독립을 옹호→김명수대법원장 임명 / 재판의 지연은 보수정권에 의한 '적폐'의 일부 / 양승태 · 전 대법원장을 구속 19.1

2018.8 대법원, 신일철주금 (일본제철) 환송심을 시작

10 대법원,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명령(10.30) / 미쓰비시중공 11.29 후지코시(1.30)

11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 / 19.7.3 절차 완료

*위안부 할머니 47명 중 34명에게 1억원 지급, 잔여금 약 5억엔

2019.1 신일철주금의 자산 차압허가 1.3 / 포스코와의 합병회사 PNR의 주식

일본 정부,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 1.9→중재위원회 설치 요청(5.20)

5 원고측, 일본제철 19.4과 후지코시의 차압자산 (주식) 의 매각신청

6 조세영차관 방일 6.16-17? / 외교부안 「한일양국의 기업이 자발적인 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확정판결의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의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화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9발표) →일본 측, 한국안을 거부하고, 중재위원을 지명하는 제3국 선정을 요구

2021.1 서울중앙지법, 일본정부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명령

4 서울중앙지법, 원고의 소를 기각 / 주권 면제 인정

진보 민족주의의 복권—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2017) / 진보세력 = 반독재 · 민주화세력, 통일세력이라는 자부심, 김구노선 (남북협상) 의 복권→남남갈등 심화 / 군사세력 = 분단세력, 친일세력

*집합적 기억 = 피해자 민족주의 / 독립운동 (임시정부), 신탁 통치 반대 운동, 4.19 혁명 (반 이승만), 민주화 투쟁(반 박정희), 5.18 민주화운동(반 전두환), 촛불집회/ 한일조약반대투쟁?

· 진보 민족주의의 역사관 / 문재인인의 삼일절 100주년 연설→김구노선의 부활

(1)「친일잔재 청산」 / 「친일」을 반성, 독립운동가를 '예우', 그것이 '정의'

(2) 3·1 독립운동의 계승 /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촛불혁명」

- (3) 「신한반도체제」 /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경제협력, 북미·북일 정상화
- 진보정권의 '이행기 정' / 박근혜 정권의 사법개입도 「적폐청산」의 대상
 - (1) 삼권분립 존중 / 사법의 정치감시 (도덕주의) 를 용인
 - (2) 피해자 중심주의 / 원리주의적인 운동단체의 의사 존중 → 위안부 재단을 해산
-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일 갈등 / 문재인 정부의 북미중재외교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 아베는 트럼프와의 친밀한 관계로 대항

아베 정권의 반격 / 65년 체제 사수

아베 총리는 보수적인 국가관·역사관을 가진 정치지도자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역사논쟁(야스쿠니 신사참배, 방미외교, 70년 담화)을 반복했으나, 2015년말 (한일조약 50주년)에 어쩔 수 없이 위안부 문제에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원고 승소)과 문재인 정부에 의한 위안부 재단의 해산 등이 다시 사태를 악화시켰다.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이 없던 것이 되고 65년 체제가 붕괴된다는 위기감을 배경으로 오사카 서미트(6.28-29) 후에 참의원선거 공시(7.4) 전에 반격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고노 외무상의 사전경고 /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양국 및 양국 간의 재산·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반하며, 1965년 이후 구축해 온 한일의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 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다”(서면 인터뷰, 동아일보 19.6.26)
- 일본의 경제산업성 '한국향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 7.1 발표 /
 - (1) 3대 핵심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 / 통보 → 7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 적용
 - (2) 수출관리상의 카테고리 재검토 →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순을 밟음 → 8월 2일 각의(국무회의)결정, 8월 7일에는 정령공포 8.28 시행
- 일본 경제산업성의 설명 /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 아베 총리는 '정차'를 말한다 /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의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이다" (7.3 당수토론) → 사실상의 경제제재 / 한국 측은 GSOMIA 파기로 대항
- 아베 기자회견(7월 22일) /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이다. 신뢰 문제이다."
 - *수출관리정책과 연관시킴으로써 한국이 조기에 굴복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 공과(功過) / ① 선을 굶고 65년 체제를 지킨다, ② 분단정책으로 공급망과 교류를 차단

새로운 시대의 한일관계—그 윤곽

정체성 정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갈등이 많은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이 한일강제병합의 역사와 사죄가 빠진 국교정상화에서 기인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인은 그것을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조지 케넌(George Frost Kennan)의 경고를 말할 필요도 없이 국제정치와 외교를 법률주의와 도덕주의로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명한 일도 아니다. 일본의 메이지 시대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지정학적인 불안"을 법률과 도덕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한일 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부당하다고 해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성장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필요한 것은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이상주의)의 균형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이다.

- 사실상 한국 사법의 정치개입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듯 하다. 1월 중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소송에 관한 서울중앙지법의 원고승소판결(1월)에 대하여 "약간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는 뿐 아니라 2015년 12월의 위안부 합의가 "정부 간의 공식 합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도 '현금화'를 회피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4월에 다른 위안부 할머니의 소송을 기각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 향후 정치일정을 생각해 본다면 한일관계의 단기적 개선은 용이하지 않다. 앞으로 1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대책, 도쿄 올림픽(7 월),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9 월)과 중의원 해산(10 월까지),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내년 3 월)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은 외교적 난제 해결에 대응할 여유가 있을까? 더구나 양국의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외교교섭은 한일의 차기 정권에 맡겨지게 될지도 모른다.

· 최근 한국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모두 상대방에 대해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42.8%와 48.1%에 달하며,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5.2%와 37.0%에 달했다. 또한 “양국 정부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일본 측은 64.7% 이고 한국 측이 78.0%였다. 감정적인 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온건하며 “건전한 상식”을 잃지 않고 있다.

· 향후 한일관계의 윤곽을 생각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요소가 중요해질 것이다—

- ① 대등한 경쟁관계 / 선진적인 IT 기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융성 (음악, 영화), 1 인당 GDP 와 국방비 상승 등이 일본과의 비교에서 한국인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가혹한 과거의 기억을 극복하고, 한국인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 다행히도 많은 일본인, 특히 젊은 세대의 일본인들은 그것을 무리 없이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 새로운 정체성의 탄생과 한일의 세대교체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좋은 라이벌이 절친처럼 좋은 친구가 되는” 관계가 한일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 ② 국제시스템의 변화 /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새로운 국제시스템의 변동을 예감하게 한다. 새로운 냉전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심각한 체제경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동맹국과 우호국의 결속이 요구될 것이다. 이미 자유 공개 인도-태평양 전략 (FOIP)뿐 아니라 쿼드(QUAD), 그리고 한미일 삼국의 연계강화가 표면화되고 있다. 또한 이들 노력과 병행하여 북미 간의 비핵화 교섭이 실무차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은 내년 3 월에 있을 한국의 대선이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국제 시스템의 형성이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 ③ 전략공유 가능성 / 한일 양국은 미중 대립에 끼여 기본적 가치(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와 인권)를 공유하는 미들 파워이다. 대국의식이 없는 한일은 미들 파워의 전략을 공유할 수가 있다. 작년 9 월 스가 총리와 의 전화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일에 전략공유가 정착되면 그것이 일본인과 한국인에게 의식공유를 촉진시킬 것이다.
- ④ 재출발의 토대 / 장기에 걸친 한일관계 악화가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가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과거에 한일양방의 일반 국민들이 환영하고,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이 균형 잡힌 98 년체제, 즉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재출발의 토대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부활시키기 위한 의식이 필요하다.

코멘트
1

오코노기 선생님 강연을 듣고

심규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이런 중요한 자리에 불러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코노기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코노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최근의 한일관계 문제를 가장 논리적으로 또는 구조적인 입장에서 분석한 강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한일관계를 정체성의 문제로서 분석하고 결론으로서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의 균형을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정체성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분석한 것을 들은 건,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꼭 2년전인 2019년 4월달에 전경련과 SETO 포럼에서 그때 선생님께서 정체성의 충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인상깊게 들었는데 그 이후에 선생님의 한일관계의 분석의 틀이 점점 더 깊어졌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으로 봅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만약에 한일관계가 정체성의 충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존엄이라고 하는 단어의 충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일관계의 충돌이 과거사의 충돌이 아니고, 결국은 미래의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한국도, 일본도 이제 과거사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발현에서 오는 그런 어떤 요구조건을 일본한테 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의 어떤 요구조건이나 압박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에 굴복할 수 없다는 그런 자존감의 어떤 표현,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자신감과 자존감, 이 두가지의 충돌은 결국 이것이 아이덴티티의 한 종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일 관계는 해결을 논의한다고 한다면 ‘이제 과거사 문제만을 가지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의 강의, 레주메를 전부 다 훑어보고서 나름대로 보면 한일관계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5가지 정도로 요약했는데요, 첫번째는 뭐냐면, 이전 과거의 한일관계가 정치가 주도했다면,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Q&A를 보니까, 히토츠바시에서 공부하는 어느 분께서 ‘정치가 더 세진 게 아닌가’ 그런 질문이 있었습디만, 제가 볼 때는 정치가 세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를 좌우하는 시민, 정치인이나 국민이나를 보면, 국민이 훨씬 더 강해지지 않았는가, 총리관저 중심의 정치도, 청와대 중심의 정치도, 사실은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으로 바뀌었다, 일본도, 한국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우를 보면 정치주도로 국민의 의사를 무릅쓰고,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3가지 결단을 내린 대통령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65년도에 한일국교정상화이고, 98년도에 모든 국민들이 다 문화개방을 반대했지만 그것을 강행한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많은 사람들이 한일합의를 반대했지만 그것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즉 정치 주도로 한일관계를 논했지만, 이제는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듯이,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정치주도가 세진 것 같지만, 내막으로는 국민의 주도로 넘어간 거 아니냐,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도 국민의 눈치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기 어려운 시점에 왔다는 것이 제 첫번째 생각이고.

두번째는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원치 않으면서도 합의나 내지는 봉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타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타율 중에 하나는 냉전이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냉전과 미국을 떠나서 한국과 일본 모두 자율적인 규제를 더 우선시하는, 물론 당연히 미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국의 역할만으로 한일관계가 좋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저는 타율 규제가 자율 규제로 바뀌는 시대에 우리 한일이 있다.

세번째는 지금까지는 소수의 요인만이 한일관계를 규정했는데, 이제는 복합 다수, 여러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법원의 판결이기도 하고, 또는 아시다시피 경제 문제까지도, 외교안보문제까지도 터져 나오는 이로써 소수 요인이 다수 요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제 세번째 생각이고요. 네번째는 뭐냐면, 양자문제가 양자가 가지고 있던 미시적 관계가 이제 다자가 가지고 있는 거시적 관계로 바뀌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중국과 북한 문제가 예전보다는 한일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양자 미시관계가 다자 거시적 관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4가지를 전부 다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말하자면 이성적인 관계가 감정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윤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윤곽에 100% 동의를 하면서도, 그 윤곽이라는 게 타율 내지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문제에 많이 있습니다.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과거의 오부치와 김대중 대통령의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 스스로가 국민 레벨에서 또는 지도자 레벨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모델로 보는 98년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속내를 보면, 사죄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를 요구하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의 용기, 사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과한 오부치 총리의 배려, 이 두가지가 없었으면 저는 불가능했다는 면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코멘트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2



기रो에 선 한일관계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한국의 입장에서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

[요지]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역사, 외교안보,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걸쳐 협력은커녕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대일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 도쿄 축을 활용한 대미외교, 대중외교, 대러 외교 그리고 대북관계를 구상하는 상상력이 요구된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속에서 한일은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전 시대 서유럽(독/불/폴란드) 국가들이 미소가 이념적, 군사적 대립을 벌이는 동안 스스로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화해로 극복하고 유럽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어간 역사적 과정은 미중 양강 구도에 끼어 있는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민주국가에서 국민 여론은 중시되어야 하나 역으로 국민 정서, 대중의 감정에 휩쓸리는 대일 과거사 외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냉철한 국익의 계산과 철저한 전략적 사고로 대일외교를 정립해야 하며 그 기반은 일본의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티를 제대로 읽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이원덕입니다. 문제없죠? 그러면 시작해도 좋습니까? 예, 예. 오늘 귀중한 회의에 초대받아서,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일본에 계신 오코노기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과도 벌써 1년반 가까이 대면한 지가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화면을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잠시 연결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기रो에 선 한일관계, 무엇을 할 것인가’ .

1. 한일관계의 현상황 분석

이처럼 한국의 입장에서 제목을 달았고, 한 10개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번째 지금 한일관계를 진단해보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번째는 지금 한일관계가 외교적으로 냉각돼 있죠. 정부간 관계가 거의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악화돼 있고, 국민수준에 있어서의 호감도라고 할까요, 이것들도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의 혐한, 한국에서의 반일 정서가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한일관계 악화현상은 단기적이고, 최근에 나타난 게 아니고, 잘 들여다보면 2010년대 이후, 2012년 이후부터 대단히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현상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최근의 한일관계를 보면, 피해자, 가해자 관계에서 공수가 전환된 것과 같은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소위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 입장에서 일본에게 역사문제에 대한 추궁을 하고, 일본은 그것을 디펜스하는 입장이었다면 최근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일본 국민들이 오히려 한국의 여러 가지 공세에 대해서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특징은 과거에는 한일관계가 주로 과거사 갈등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분야 등 전분야로 확대돼서 전면적인 악화를 겪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네번째 특징으로는 한일외교 문제가 양국의 국내 정치와 연동돼 있어서, 특히 한국에 있어서 소위 정치적 진영논리, 진영간 대립의 소재로 한일외교 문제가 왕왕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는 것이 또 한가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한국문제가 국내 정치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관계의 특징으로, 코로나 이후 인적인 왕래가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그나마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교류와 인적왕래의 끈이 이어져왔던 상태였는데, 그나마도 최근 인적왕래가 전면 중단되어서, 관계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와중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쟁점, 이슈를 소개해드리면, 우선 첫번째 위안부 합의 문제가 있죠.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 조치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반발이 상당히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그나마 위안부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에서 최근에 위안부 배상과 관련한 판결이 2가지가 있었는데,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올 1월의 판결과 주권 면제를 인용하여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4월의 판결이 나와, 다소 혼란 상황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소로서 장기적으로 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두번째 징용 문제인데요, 징용문제가 한일관계의 악화를 초래하는 최대 악재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에 투자한 일부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한국의 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 프로세스를 밟고 있고 이른바 현금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의 반한감정, 한국에 대한 혐오를 깊게 일으키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안전보장 문제인데요, 설명할 것도 없이, 제주도 관함식에 육일기를 계양한 일본의 해상자위대 입항을 허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 논란이 크게 벌어졌고 마침내 해상자위대 함정의 관함식 불참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동해 해상에서의 레이더 조사를 둘러싼 충돌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구축함이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했느니 안했느니 하며 한일간에 상당히 충돌과 갈등을 겪었던 일이 있죠. 그리고 지소미아를 둘러싼 소동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한일관계가 협력은커녕 갈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영역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내린 수출규제조치,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한국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한국에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던 노 재팬 운동,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역으로 일본의 반한감정을 불러 일으켰죠. 이렇게 볼 때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한일관계는 대단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한일관계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북한문제입니다.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어프로치에도 큰 온도 차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문제, 북핵문제를 풀어가려는 한국과,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압력과 제재의 방법으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 간에는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일관계를 어렵게 하는,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가장 큰 요소는 한일관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가 크게 유동화하고 있다, 말하자면 세력전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일이 약간 포지셔닝을 달리함으로써 생기는 갈등이 구조적으로 한일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강하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한일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두번째는 구조적으로 한일관계가 과거에는 수직적인 관계였죠. 일본이 강대국,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입장이었는데, 근 30여년 지나면서 이러한 한일관계도 점차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GDP 추이를 정리해보자면, 수교당시의 일본과 한국의 경제규모는 약 3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10대 1로 좁혀졌고, 2010년이 되면 6대 1이 됐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3대 1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인구 수를 고려해보면 거의 1인당 GDP로 볼 때 한일은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일관계가 이제는 더이상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도 한일관계 악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아무래도 엘리트의 교체가 진행되면서 한일간의 그동안 긴밀했던 정치경제 엘리트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는 한일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막후에서 그것을 조절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휴먼 네트워크가 이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없어졌

다는 것도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 무역관계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서로 의존하는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일본은 한국의 다섯 번째로 큰 교역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에 있어서 한국은 세번째의 교역국가로 남아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한일경제 상호의존도는 상당히 저하됐다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한일관계는 왜 이렇게 나빠졌는가

다음으로는 ‘한일관계가 왜 이렇게 나빠졌는가’ 하는 직접적 원인진단 부분인데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한일 상호간의 인식에 있어서 지나친 오해, 편견, 무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여기에는 양국의 미디어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어제 또 다른 유사한 세미나에서 지적된 바가 있지만 최근 한일의 미디어에는 상당히 질이 낮은, 상호 간 악의적인 혹은 질이 나쁜 보도가 빈번하게 나감으로 해서 오히려 양국간 오해와 편견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악화원인으로서 한일 간 정치 리더들 간의, 특히 최고 지도자 간의 소통 부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일 간에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교토에서 가진 이래, 제대로 된 정식의 포괄한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정상회담조차 열리지 못한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양국 간의 최고지도자 간의 소통이 사실상 두절됐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안 좋아진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요소는 ‘일종의 국가정체성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정치적으로 민주화 이후 인권의식이 상당히 고양되었고, 또 시민사회 발언권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와 피해자 그룹 관계를 보면, 피해자 그룹의 목소리가 지나칠 정도로 커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일외교에 있어서는 강경론을 요구하는 민족주의적인 성향도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2010년대 이후 특히 정치권이 상당히 보수화되고 있고, 외교에 있어서도 나름 ‘주장하는 외교’ 라고 해서 일본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려는 측면이 강해졌고, 안보면에서도 ‘적극적 평화주의’ 라고 해서, 말하자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은 30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소위 잃어버린 30년의 세월동안 국민차원에서 사회심리적인 불안도 확대되고 있고, 역사문제에 대한 태도도 많이 변화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수정주의적인 세력이 대두했고, 관용적인 역사외교도 사실상 실종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양국의 국가정체성이 충돌하고 있는 측면이 눈에 띄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전략적인 인식에 있어서도 한일 간에는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특

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은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권의 중추부의 생각으로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시켜주기보다는 오히려 훼방한다,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을 지니고 있고, 일각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재팬 패스론’ 이라고 하는 생각이 표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를 보면, 미국과 중국을 대단히 중시하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일본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평화경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외교의 외연을 신북방, 신남방 정책으로 펼치는 가운데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한일관계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 하에서 쿼드를 중시하는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 지금 중국하고의 대결구도를 염두에 둔, 대중 포위망 형성을 추구하는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그 경우 ‘한국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일본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한국은 중국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라는 근본적인 우려가 일본 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그야말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중요한 근린 국가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주요문서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는 내용들이 자주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보는 전략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있어서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 한국의 대일외교는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한일관계는 한국 외교의 기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미동맹 관계의 숨겨진 코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체제의 일각을 차지하는 게 한일관계란 의미죠. 이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두번째는 도쿄 축을 경유한 한국의 외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미관계, 대중관계, 대북외교에서 도쿄 축이란 건 무시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지금 상당히 무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에 있어서, 한미일, 한중일, 한러일, 남북일 등등의 소다자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서도 한일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토대이자 외교적 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아시아의 중요한 중심 국가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경제적인 과제를 공유한, 공통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 그런 양국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미중 전략경쟁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처지에 놓인,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히 안보면에서는 미국에, 마켓, 즉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한일관계는 역사에 매몰된 나머지 협력과 공조가 불능상태로 빠지게 될 경우, 한국의 국익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사에 매몰된 한국의 대일외교는 국가이익을 손상시키고 치명적인 손해로 귀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한일관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럼 악화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가지 한일간 갈등 요소를 얘기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징용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안부 문제도 갈등 요인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위안부 문제는 2015년의 정부간 합의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을 추구할 경우에 큰 문제는 현재로서 없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징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국 한일관계 악화의 뇌관은 뭐니뭐니 해도 징용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징용문제는 한국측이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즉 시나리오는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의 시나리오는 방치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내버려두고 법원에서의 현금화를 방지할 경우, 한일관계 악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책은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로는 한국 정부나 청구권 수혜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징용 피해자에 대해 대위변제를 하고, 사후 조치는 기금조성이나 입법조치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한국 내에서 합의되기 어렵다고 하면, 대위 변제된 자금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 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번째 방안은 사법적인 해결이 있습니다. ICJ 혹은 중재위원회에 회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한국이 사실상 식민지와 관련된 배상 요구를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전부 배상을 포기하고, 그 대신 정신적으로 역사 청산을 추구하는 방향의 외교 노선을 선택하는 방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쪽도 상관 없다, 징용문제를 해결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선택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는 ‘징용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나,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온 3사건의 피해자 그룹에 대한 배상 조치, 거기에 한정해서 일단 해결을 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범위를 좀 더 확장하더라도 한국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14건의 징용 소송에 한정해서 문제해결을 꾀한다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징용문제가 대대적으로 식민지 배상 청구 문제로 이어지는 그런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에는 소위 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징용 배상 소송이 끝없이 제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8년 판결이 나온 이후 이제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용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한국의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것에 한정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사람수로 하면 제가 보기엔 아무리 많아도 300명 정도, 액수로 말하면 300억원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용 피해자수를 21만명이라고 집계하는 경우도 있고, 100만명이라고 말하는 수도 있죠. 그렇게 될 경우 21조원 문제이기도 하고, 100조원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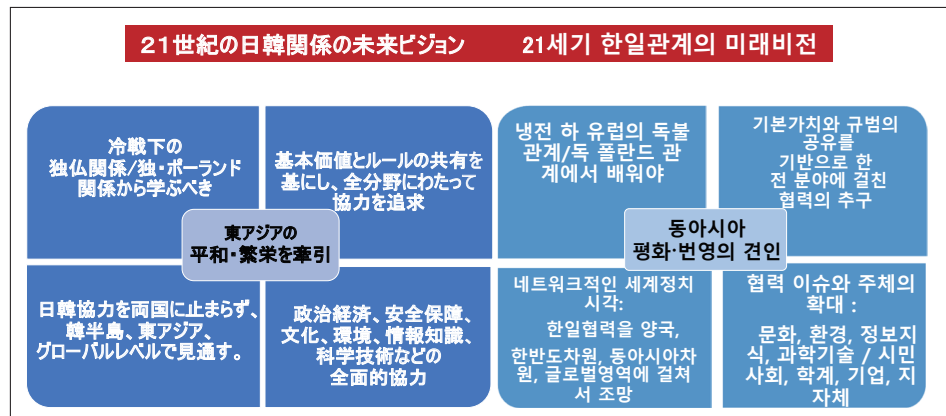
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승소한 결과에 한정해서 배상조치를 한다고 보면, 지금은 54억원의 문제고, 소송에 계류된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나와 승소한 사건의 피해자 수를 합산한다면 대체로 300명, 즉 300억원의 문제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진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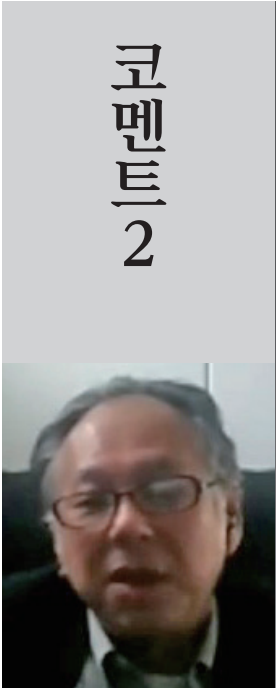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최근 국내외 정세를 보면,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압력이 여기 저기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미국 쪽인데요, 바이든 정부 수립 이후에는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아마 한일관계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입장만 보더라도, 작년말부터 대일외교를 상당히 유연하게 가져가고 있는 측면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컨대 올해 초에 기자회견이나 삼일절 기념사 등등을 볼 때, 위안부나 징용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유연한 대일외교를 개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스가 정부는 올림픽 개최하는 문제, 코로나 방역, 경제, 3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측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스가 정부에게도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근린 외교를 재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일본 외교의 장기적인 전망을 생각해 볼 때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악화된 한일관계를 수습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는 단기적으로 보면 두 번 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 첫번째 모멘텀이 영국에서의 G7회담이고, 두번째 모멘텀은 도쿄 올림픽이라고 봅니다. 이 두가지 계기를 활용하여 한일 양정상이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에 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일관계는 크게 보면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공동의 운명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문제를 극복하고, 공생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영역에 있어서, 다층적인 협력 추구가 요구되는 그런 관계가 한일관계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멘트 2

이원덕 선생님 강연을 듣고

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발언은 일본어]

이원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좀처럼 볼 기회가 없는 가운데 온라인으로라도 직접 말씀을 듣고 대화할 수 있는 걸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원덕 선생님께서 한일관계악화 배경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이후 과제나 비전에 대해서도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강연내용에 ‘한일은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말을 써 주셨는데,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또한 그 목표에 관해서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실현할지’ 라는 수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원덕 선생님은 단기적으로 G7, 도쿄올림픽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개선을 촉진하는 내외환경을 4가지 정도로 제시하셨는데, 그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바이든 정권의 한일관계개선에 대한 외압강화’ 가 가장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라는 건 장기에 걸친 전망입니다. 바이든 정권은 이와 같은 외교방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 이걸 ‘3월 31일 발표된 국가안정보장전략의 잠정지침’ 이지만, 중국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 상대로 간주해, 대중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밑부분에 있는 대로 ‘동맹관계는 ‘미국의 가장 훌륭한 전략적 자산’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과 발맞춰 가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SGRA | 61 | REPORT

바이든 정부의 외교 · 안보정책

(3월 31일 발표 국가안정보장전략 잠정지침)

- 중국은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상대
- 미군은 인도태평양지역과 유럽에 중점 배치
-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협력을 막지 않을 것. 기후변화, 의료, 핵군축 등에서 “협력을 환영한다”
-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시급히 되찾을 것
- 무역과 경제정책은 “소수 특권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
- NATO, 일본, 한국, 호주와의 동맹관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
- 북한 핵문제는 “한국, 일본과 보조를 맞춰 핵, 미사일 계획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외교력을 결집시킬 것”

슬라이드 1

바이든 정권 출범뒤 미중외교 대국간 경쟁의 최전선이 된 동아시아

【미국】

- 2/11 미중전화협의
- 3/12 미일호주인도 쿼드 정상
- 3/16 미일2+2, 3/17한미2+2
- 3/18-19 미중 외교관협의
- 4/15-16 케리특사 방중
- 4/16 미일정상회담
- 4/22-23 기후변화서밋
- 5/3-5 G7 외교장관회담
- 5/21 한미정상회담

【중국】

- 2/11 미중전화협의
- 3/22-23 라브로프 러외무부장관 방중
- 3/24-23 왕이 외무장관 중동방문
- 3/31-4/2 왕이 외무장관 동남아방문
- 4/2-3 정의용 외무장관 방중
- 4/5 중일 외무장관 전화협의
- 4/16 중독프 정상 기후전화회의
- 4/20 보아오포럼서 한중정상 연설
- 4/22 시주석 기후서밋 연설

슬라이드 2

현실외교예선(슬라이드2), 외무·방위 관계의 2+2협의를 미일이 하고 있고, 한미에서도 그렇고, 실제 정상회담도 미일, 한미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 일본, 한국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으로, 동아시아가 대국간 경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외압을 이용해 한일 관계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건 본의도 아니고,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만, 쓸 수 있는 요소는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연속해서 이뤄진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슬라이드3)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슬라이드4)을 나란히 놓으면, ‘중국’을 명시하고 있는지, 홍콩과 신장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라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경제안보측면을 강조하고 자유롭고 열린 지역질서를 만들어간다는 큰 틀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5에 향후 외교일정을 열거해 봤습니다. 미국을 허브로 향후 아마도 동맹국, 파트너국을 모아 전개해가며 일본이나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미일정상 공동성명(4/16) 포인트

-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 52년만의 ‘대만’ 명기.
- 미일안보조약 제5조 센카쿠열도 적용 재확인
-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공유
-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정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를 결의함.
- ‘미일경쟁력·강인성(코어) 파트너십’ ‘미일 기후 파트너십’ 출범
- 연구·기술개발협력과 반도체 등의 공급망 연계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대통령은 납치문제 즉시해결에 대한 미국 관여 재확인
- 한국과 3개국 협력이 안전·번영에 불가결하다는 점 일치

슬라이드 3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5/21) 포인트

- 철벽 동맹 재확인, 지역과 세계 질서 핵심축으로 기능
-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유엔결의 완전실시
- 북과의 정상합의에 기반한 외교와 대화, 미국은 남북대화협력 지지
- 한미일 3개국 협력의 근본적 중요성 강조
- 미국의 FOIP비전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연계에 노력
- 쿼드를 포함한 지역다자주의 중요성 인식
-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
- 기후, 보건, 신기술, 공급망 등 파트너십
- 외국투자심사, 기술수출 관리 중요성, 최첨단 반도체 제조협력

슬라이드 4

동아시아를 둘러싼 향후 주요일정

- | | |
|----------------------------|---------------------|
| • 6/11-13 영국G7, 한/호주/인도 참석 | • 연내? RCEP발효 |
| • 7/1 중국공산당 100주년 | 【2022년】 |
| • 7/11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60년 | • 2/4-20 베이징 동계올림픽 |
| • 7/23-8/8 도쿄 올림픽 | • 3/4-13 베이징 패럴림픽 |
| • 8/24-9/5 도쿄 패럴림픽 | • 3/9 한국 대선 |
| • 9/14 유엔총회개막 | • 5/9 문재인대통령 임기 |
| • 가을? 중의원선거, 자민당총재선? | • 5/15 오키나와 반환 50년 |
| • 10/30 G20정상회담 (로마) | • 7월 참의원선거 |
| • 11/1-12 영국서 COP26 | • 8/24 한중 국교정상화 30년 |
| • 11월 APEC정상온라인회담 | • 9/29 중일 국교정상화 50년 |
| • 12/17 김정일 총서기 사망 10년 | • 가을 중국공산당대회 |
| • 12/19 홍콩입법회선거 | • 11/8 미국 연방의회 중간선거 |

슬라이드 5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원덕 선생님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곧바로 G7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호주, 인도도 게스트로 올 겁니다. 올림픽이나 G20도 있고,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한일공동의 아젠다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이용해 한일의 전략공유를 도모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은 대중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한일 사이에는 대중국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딱히 무리하게 메꿀 필요도 없고 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차이라는 건 한일에 한정된 것도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각국들이 중국에 대한 거리감이 각자 다릅니다. 서방 선진국이나 주요국에서 전면적 대중연합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안전보장이나 초점이 되고 있는 신기술 문제, 서플라이 체인, 인권문제와 같이 주제별로 특정 목적의 연대조직을 만들어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도 인도태평양조정관이 된 커트 캠벨씨가 정부에 들어가기 직전 낸 논문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미들파워입니다. 이후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을 노린 중층적, 다층적, 다원적인 접근에 올라

‘다층적·다원적협력’을 향한 다양한 틀

‘유지연합’적인 새로운 틀 ~기존의 프레임 보완

- FOIP, 쿼드
- ‘D10(민주·인권)’ ‘T12(테크노 데모크라시)’……

- 공급망, 첨단연구개발, 신분야 규칙 형성

동아시아 연계강화의 틀 ~대중관여계속과 분단의 악영향 회피

- 한중일 협력확대, 투자협정 버전업, FTA 등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버전업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 Greater Tumen Initiative) 활용

북한정책을 둘러싼 조정

- 한중일정책조정협의회(TGOC) 부활? 6자회담은?

슬라이드 6

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종래의 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뜻을 함께하는 연합과 같은 것도 생겨날 겁니다(슬라이드 6). 최근 화제가 된 FOIP나 쿼드도 그 중 하나이고, 종래의 국제사회 거버넌스를 보충하는 것으로 새로운 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G7에 한국이나 호주, 인도 등을 더한 D10이나 T12라는 구상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테크 관련성이 강한 스웨덴, 핀란드 혹은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틀이라고 합니다만, 서플라이 체인이나 첨단기술 문제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계속 활용하면서 이익 공유를 도모해 가면 어떨까 합니다.

한일이 직접 마주 앉아 단기간에 폭넓은 포괄적 합의를 만드는 건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 주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형태로 국제사회 흐름을 이용하면서 전략 공유를 피하는 편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일 양측 모두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단히 가까운 지역에 있고, 경제관계도 깊은 상황에, 이와 같은 노력을 함과 동시에 대중관여지속이나 미중 디커플링, 분단의 악영향을 되도록 회피해 가는 것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틀로서는 ‘한중일 삼국의 협력확대’가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선 투자협정 버전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중일 투자협정은 지금도 있습니다만, 중국과 EU가 최근 맺은 것에 비하면 레벨이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것을 버전업하는 거죠. 또는 최근 RCEP가 생겼습니다만, 그 중심인 한중일이 FTA를 맺고 보다 레벨이 높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RCEP도 발효 뒤,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돼 있으니 한일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중국에 대응을 촉구해가는 겁니다. 실제 접근방법에 대해선 이원덕 선생님이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돼, 답변 시간이 있다면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2 부

자유토론

사 회 : 김웅희

토론자 : 김지영 (한양대학교 부교수)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교수)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발언은 모국어]



김웅희 2부 자유토론에서는 김지영 교수님, 고하리 스스무 선생님, 니시노 준야 선생님, 그리고 박영준 선생님 순으로 5분 정도 자유토론을 해주시고, 자유토론이 끝난 이후에 강연자 선생님과 지정토론자를 포함한 토론자 선생님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의 김지영 교수님, 자유토론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김지영입니다. 저도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일관계가 지금 어느때보다 엄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발표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관계개선을 위해서 나가야 할 중요한 방향키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 선생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두 분 선생님께서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아이덴티티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저도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아이덴티티 정치를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아이덴티티에 근거해서 국가 구성원들이 정해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일 간 아이덴티티 갈등, 즉 역사문제 갈등이 한일간의 정치, 안보, 경제 분야의 교류에 있어서 우리의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를 정해왔으며, 그에 따라 양국의 정책이 지금까지 정해져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선생님께서 아이덴티티 정치를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한일간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왔던 갈등의 해결책으로서의 투트랙적 접근,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키는 접근이 이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현재도 역사 문제와 기타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최근에 강력하게 원트랙 정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일 간 복합적인 갈등을 푸는 열쇠는 투트랙 정책보다는, 이제는 원트랙 정책 쪽으로 해결책을 찾아 가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번째로는 이원덕 선생님께서 한일관계와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는 저는 특히 일본의 국내 정치요인하고 한국의 한일관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일본 국내에서 이른바 ‘한국 피로감’ 과 ‘한국은 국제규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 라는 인식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반한 감정이 한일관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변수로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2019년 수출규제조치는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일본 국내에 팽배한 반한감정을 선거에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미우리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86%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위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76.8%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강경대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스가 총리는 2015년 위안부합의 실패로 인해서 자민당의 내부적인 비판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한국과 타협으로 보일 수 있는 결정에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한일관계의 악순환은 일본 정부 및 정치가의 우익적인 정책 및 발언이 원인이 돼서, 이에 대해서 한국 대중의 반일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반발, 그리고 한국 미디어의 과민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경책 선택,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최근에는 일본 대중의 반한 감정이 한일관계를 움직이는 중요하는 연관변수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변수가 한일관계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이며, 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한일협력에 어떤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두분 모두 바이든 정부의 탄생이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나 또 한가지 생각해볼 점은 바이든 정부가 외교와 안보를 담당하는 간부에 오바마 행정부를 지지한 직원을 많이 기용한 것으로 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압력이 만약 한국에게 대응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한국은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의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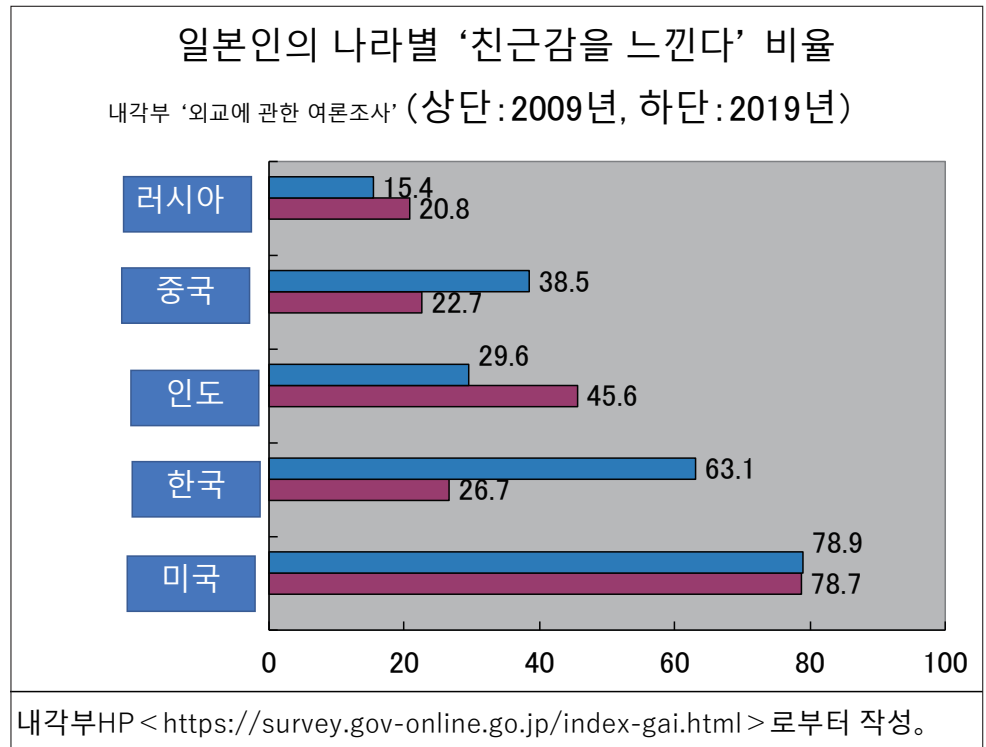
김용희 김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하리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고하리 스스무 안녕하세요. 오늘과 같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도 도쿄도 아닌 시즈오카라는 도쿄에서 200킬로 정도 떨어진 지방도시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합에 지방에서 참가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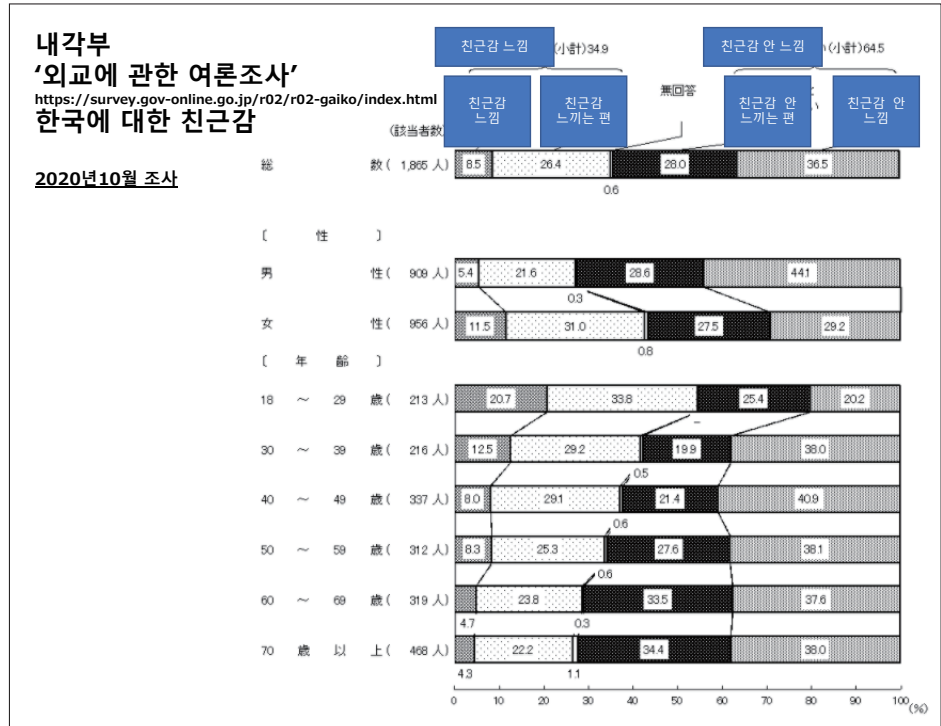
저는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저는 국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서로에 대한 바라봄’ 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이원덕 선생님 말씀 가운데 피해자 의식이라는 말이 있었습디다만, 지금 일본 내에서 그 같은 감정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이 숫자를 봐주셨으면 합니다(슬라이드 1). 이걸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로부터 작성한 겁니다.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한국에 대한 부분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63.1%가 한국에 친근감이 있었습디다만, 2019년에는 26.7%로 확 줄었습니다. 일본인은 미국을 정말 좋아하니 미국에 대한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디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두 분의 보고를 들으며 생각한 걸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오코노기 선생님 강연에서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이라는 말이 있었습디다. 한국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일본에 대해 정의라는 이념이자 ‘아이디얼리즘(이념)이야말로 리얼한 외교’ 라고 (청와대 참모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일본은 모두 리얼리스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념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수출규제 등으로 사실상의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외교 자세의 엇갈림으로 국민 서로의 ‘친밀함’ 에 대해서도 꽤 시각이 변해 온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의 균형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서로 이와 같은 외교 자세에서 좀쳐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럼 정치결단이나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두번째 이것도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에서 가져온 건데요, 슬라이드2를 봐 주십시오. 작년 여론조사로 34%가 한국에 친근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여성이 높은 편으로 42.5% (남녀를 포함한 세대별로는) 특히 18-29세가 높아 54.5%였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코로나로 교류가 차단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 예컨대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나 K-POP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까 언급된 징용공문제로 일본 국민 8할정도가 (한국정부 대응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같은 사람들이 실은 ‘사랑의 불시착’ 은 정말 좋아한다고 대답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일본과 (아마도) 한국 양측 모두 (상대국에 대한 바라봄, 감정, 관심이) 한 가지로 모아지는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고 동일인물이라 해도 때에 따라 감정이 바뀌는 것으로, 이 지점을 위정자들은 생각하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하나 더 (슬라이드3). 이원덕 선생님 말씀대로, 교류가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인가 하면 가장 많은 한국인이 일본에 온 게 2018년 750만명이었습니다. 이 때는 한달에 64만명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은 1100명입니다. 한편 일본인은 어느 정도 갔을까요. 최근에는 2019년이 320만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올해 3월은 949명으로 이 같은 하락이란 것도 의식해야 할 겁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류 등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직접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프먼이라는 사람이 한 “직접 체험이 아닌 ‘머리속에 그려진 사회’ 에 의한 의사환경” 이라는 말이 있습니

급감한 양국간 인적 왕래		
한국인 일본 입국자수(2018년과 2021년 비교) 4월 ※출처 : 일본정부관광국(JNTO) 통계		
2018년 4월 (연간750만명)	⇒	2021년 4월
6 4 만명		1,100명
일본인 한국 입국자수(2018년과 2021년 비교) 3월 ※출처 : 한국관광공사(KNT) 통계		
2019년 3월 (연간320만명)	⇒	2021년 3월
3 8만명		949명

슬라이드 3

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한국을 볼 때 한국인이 일본을 볼 때 그것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사는 시즈오카현 시미즈라는 곳은 참치 어획량이 일본 제일인 지역입니다. 항구에는 육일기와 같은 깃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정치성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실제로 일본에 온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알게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일본인도 한국에서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친일’ 이라는 말은 지금의 일본을 싫어하는 건가 하면, 이건 옛날 얘기죠. 이런 것도 실은 서로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좀처럼 알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연예인 커플 탄생이 화제가 됐습니다 (TV드라마 · 약칭 ‘니게하지(逃げ恥,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부부를 연기한 아라가키 유이와 호시노 겐의 결혼발표). 이와 같은 뉴스도 2시간후에는 한국의 일반 전국지 인터넷 뉴스에 나오죠. 이러한 것도 서로 교류가 있으니 알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현실 교류의 소중함이란 걸 한번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몇 가지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걸로 보완해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웅희 선생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니시노 준야 선생님에게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니시노 준야 보고자 선생님, 패널리스트 선생님, 동시통역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의 강연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특히 한일관계에 관심이 높은 분들이 모여 계신 듯하여, 내용이 상당히 겹치게 됐습니다만 제출한 토론요지에 따라 크게 3가지만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상대방 사회 변화에 더 눈을 돌린다’ 입니다. 한일양국 모두 상대방의 리더뿐만 아니라 사회에 더욱 눈길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한국을 볼 경우 문재인 대통령 정권만 보게 되는데요,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이른바 ‘86세대’ 에 실망하고 있는 20대, 30대가 있고, 이러한 세대가 오코노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더욱 눈길을 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에서 말하면, 아마 일본인이 보더라도 일본사회 변화나 일본인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한국 미디어가 제대로 파악해서 전해줄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상대의 전략인식을 이해한다’ 입니다. 이원덕 선생님과 오코노기 선생님 모두 지적한 부분입니다. 특히 오코노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국이 추진하는 전략은 반드시 배타적이지만은 않고 공통적인 방향성과 과제를 찾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바이든 정권이 성립된 후 4월에 미일정상회담, 5월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때의 공동문서를 보면 미국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에 대해 유사하게 협력을 받고자 하는 공통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일관계가 나쁜 가운데, 공교롭게도 바이든 정권이 한일의 전략공유를 위한 토대 혹은 재료라는 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 갈 수 있을지가 한일양국 정권레벨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위기 관리’ 와 ‘새로운 관계’ 의 구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리라는 말은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다소 부정적인 말입니다만 이것도 이원덕 선생님, 오코노기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상황에선 관계 개선이 수월하지는 않다, 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관계악화를 막는다는 의미의 잠정적 관리라는 게 필요해집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문제입니다. 오코노기 선생님이 마지막에 98년 한일공동선언이라는 걸 지적하시고, 저도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관계가 구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쉽게도 그걸 토대로 하면서도 되돌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즉 20년전과 지금은 일본과 한국의 상황, 그를 둘러싼 상황, 그리고 한일의 역학관계가 너무나도 크게 바뀌어 버렸기에, 20년간의 변화라는 걸 되짚은 뒤에 새로운 관계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자각적이어야 합니다.

심규선 선생님도 지적하셨지만, 역시 국민의 목소리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양국 사회의 분위기, 국제시스템변동, 이러한 걸 감안하고 나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자각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윙희 마지막으로 국방대학의 박영준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준 한일아시아미래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오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측의 오코노기 선생님, 또 니시노 선생님, 고하리 선생님 오랜만에 뵙게 뵙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이원덕 선생님과 더불어서 한 10년전에 한일신시대공동연구위원회에서 세 분 선생님 모시고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연구에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본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정치랄까, 경제랄까, 사회문화, 과학교류 분야에 걸쳐서 협력해야 된다는 제안을 공동연구를 했었고요, 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했었고, 저희가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도 책을 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한일관계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요. 왜 10년 전 저희가 냈던 공동보고서가 실현되지 못하고 한일관계가 악화됐을까,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교수님들 발표가 많이 참고되고, 공부가 되어서, 저는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 오코노기 선생님도 양국간의 정체성의 충돌이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코노기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소위 한국의 진보 내셔널리즘 정권, 거기에 대한 아베 정부의 반격, 한국 사법부의 정치개입,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큰 틀에서 핵심을 잘 짚어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국 정치 세력 간의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 또는 내셔널리즘에 대한 차이, 정체성의 차이가 누적이 되면서 이 문제가 커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10년 전에 냈던 보고서는 정부에 대해서, 혹은 양국 지식인 사회에 대해서 냈던 것이지만, 조금 더 정치세력 혹은 사법부까지 포함한 국가지도자들의 인식의 변환, 전략의 공유 등이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최근에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그것이 한국 정부에도 부담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한국정부에서 한일관계의 개선을 모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원덕 선생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올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삼일절 기념사 등에서 보게 되면 “한일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다만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악화된 한일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랄지, 또 위안부에 대한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결정, 이런 것들이 걸려있습디만,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한국의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일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가 진정 바란다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재검토하고 이걸 복원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이건 행정부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이랄지, 행정부의 결정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해치유재단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앞으로 일본 정부의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런 것들을 논의하는 수순으로 나가고요. 아까 이원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원덕 선생님이 지적하신 정치적 해결,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들어갈 배상의 책임을 지고, 또 그런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세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은 일본과의 관계가 한국이 추구하는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일본측도 그렇지만, 한국측의 정치지도자들이 재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입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의 관계에서 예컨대 불가침협정이 체결되고, 그런 것이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크게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것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가고, 지금까지 국교를 맺지 않았던 미국이나 일본과도 국교를 정상화해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로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완결적인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략의 추진에 있어서 북미관계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북일관계의 정상화, 아까 오코노기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02년 평양선언에 기반한 북일관계의 정상화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미들파워로서 여러 가지 외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중견국으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입장에 처해있는 일본과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생각을, 우리 정부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일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견국 외교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한중일 협력기구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일본과의 협력을 재개하는 것이 한국의 미들파워 외교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여러가지로 한국의 안보, 외교, 또 대북관계에 있어서 한일관계 개선이 한국의 전략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관계개선에 앞장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네, 박영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토론이 끝났는데요, 사실이 회의를 처음 기획한 것은 1년 이상 전이었습니다. 그때의 제목이 ‘기로에 선 한일관계’ 였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도 ‘기로에 선 한일관계’, 여전히 한일관계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기로에 서 있으면서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폐색감이라고 할까요, 답답함이 있었는데, 요즘 보게 되면 강연자 선생님이나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가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일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변화도 있긴 하지만, 뭔가 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다소 낙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발표자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공통된 1가지로 수렴할 순 없습니다만, 일정한 방향성 하에 놓여있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코노기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시 리얼

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의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고,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지금 한 일 양국에서 탄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호 수용하고 기존의 정체성을 상호 인정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니시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한 공통의 토대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원력의 회복, 또는 복원력을 잃었다는 표현을 제가 쓴 바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변화를 포함해서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지정 토론도 있었고, 자유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원덕 선생님부터 지정 토론자인 이주인 선생님의 토론에 대한 선생님의 리플라이와 자유 토론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답변을 포함해서 3분에서 5분 정도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덕 네, 감사합니다. 여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4가지로 정리해서 저 나름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한일관계가 어려워진 요인 중에서 일본 국민들의 인식, 감정, 이 부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가장 큰 걱정거리는 그겁니다. 사실은 한국 국민들의 반일, 상대적으로 반일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고, 그러면서도 한국 국민들은 일본하고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금년 들어서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한국이 사사건건 일본의 명예를 짓밟고 일본이 나아가려고 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 라는 인식이 일본내에서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양국의 외교관계를 넘어서 한국이 짊어진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외교라고 할까요,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올바르게 않은 인식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까 하는 것은, 외교채널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에 관해서 약간 일본측의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문재인 정부가 말하자면 오코노기 선생님 말씀을 빌리면 진보 내셔널리즘, 어떤 의미에서 이념 지향의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가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 오코노기 선생님 지적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본 내부의 시각을 보면 ‘대단히 친북적이다’ 또는 ‘반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미디어에서.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일관계가 악화된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한일관계 쟁점은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조차도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만든 문제라기보다는 과거의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문 정부의 이념적인 반일 성향 때문에 한일관계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진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책이라고 할까, ‘대일 외교를 너무 경시했다’ 혹은 ‘일본의 전략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소홀히 다뤘다’고 하는 게 오히려 비판의 포인트고, ‘적극적으로 반일을 했다’, ‘일본하고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는 건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놓쳤죠. 특히 징용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초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리 산하에 위원회 같은 것을 뒤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노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실기를 했는지, 제 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지, 그것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이라도 적절한 정책 대안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나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번째 여러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른바 한일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해야 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원인 진단을 너무 아이덴티티 폴리틱스에서 찾게 되면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둔다면 아까 오키노키 선생님 용어로 하자면 리얼리즘이죠. 사실 제가 보기에, 한국의 대일외교나 일본에게 있어서 대 한국외교는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대외정책의 출발점이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한국하고의 관계를 방치한 채 일본이 전략외교를 펼쳐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난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대외정책의 중요한 토대이고, 자원이며 기본 축입니다. 그런 전략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런 비정상적인 심각한 관계악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일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주 드라이하게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외관계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한일관계는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네, 이원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키노키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오키노키 마사오 심 선생님의 코멘트는 비교적 저에게 호의적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리더십 문제, 혹은 국민의 자각이라는 문제, 그것에 대해 노력하지 않으면 길을 열 수 없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라고 생각하지만 꽤나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전망이 있다면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현상황을 생각하면 역시 뭔가 리더십에 의한 타개가 없으면 새로운 관계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에 몇 가지 지적도 타당한 말씀이라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지영 선생님의 투 트랙 얘기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시계열적으로는 먼저 투트랙을 제기한 건 일본입니다. 한국이 곧바로 역사문제를 꺼내 들고 정치문제와 엮기에, ‘그대로는 있을 수 없다’며 어떻게든 투트랙으로 정치와 역사를 분리할 수 없을까 해서 일본이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일본측도 도저히 투트랙으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해 원트랙이 돼 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원트랙이 되자 이번에는 한국이 투트랙을 주장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투트랙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건 역사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분리하지 못하니 큰 혼란이 생겨나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어쨌든 역사문제로 이 이상 양보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 원트랙이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 있다면 투트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 정권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는 지금 중국과 장기적인 체제경쟁을 각오하고 가능한 한 많은 동맹자 혹은 우호국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에 관해서도 그러한 세계전략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후방지원하고 한미일에서 대응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의 힘에 의존하는 걸로만은 어려워니 일본과 한국 모두 주체적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지만 저 혼자 얘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해질 듯해서 일단 여기서 마이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두 분 강연자 선생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짧은 시간이지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선 선생님이나 이주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2분 정도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인 선생님, 심규선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심규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첫번째 원트랙, 투트랙 이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원트랙 투트랙은 원래 근본부터 불가능한 트랙입니다. 원래 투트랙이라는 것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원트랙이니까, 정부와 민간을 믹스해서 투트랙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정부 내에서 투트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은 2016년 한국의 시민단체가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우자 투트랙을 주장하다가 원트랙으로 갔습니다. 이때 경제문제인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위안부 문제와 정상회담을 연계하는 원트랙을 하다가 일본이 원트랙으로 가자 이제는 투트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트랙, 투트랙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두번째 매스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꼭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전부 다 ‘매스컴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제 오랫동안 경험으로 치면 한국의 일본 보도는 30년, 40년 단위로 보면 굉장히 나아지고 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면 한국의 매스컴이 일본 매스컴을 같이 취급하는데, 그건 좀 곤란하고, 한국의 매스컴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일본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하다가 지금 그것이 사라지면서, 한국과 일본 마스크이 나중에 데드 크로스가 지금 일어나는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더 분발해야 되지만, 일본 마스크도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구요.

마지막으로 오부치하고 김대중 선언과 관련해서, 3년전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세미나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러 군데 갔었고, 일본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 솔하게 많은 세미나의 자료집 중에 어느 한 자료집도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수록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것을 기념하면서 그 책 앞에는 오부치 김대중 선언문을 실은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건 뭐냐,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실천하는 것이 문제인데, 학계든 그 다음에 정부든 20년이라는 선언을 기념하는 데만 급급했지 그 내용이 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게 무슨 기념이냐고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또는 일본도 새로운 해결책이 나온다면 그것을 실천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기념적으로 생각하면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희 네, 감사합니다. 이주인 선생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주인 아츠시 죄송합니다. 음성이 중간에 끊겨서 일단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직전까지 논의의 흐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롭게 토론하면 괜찮을까요?

오늘의 논의, 오키노기 선생님의 강연에서도 정체성의 충돌이라는 것과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의 균형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생각난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일관계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도 참고가 될까 합니다만, 최근 일본에서 ‘안전보장전략’ (닛케이BP니혼게이자이신문출판본부)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얼마전까지 일본 수상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을 하던 가네하라 노부카츠(兼原信克)씨가 퇴임한 뒤 자신이 본 현대일본 외교사와 일본의 전략론을 정리한 책입니다. 400페이지 이상 되는 두꺼운 책이지만 한국에 대한 생각도 상당히 들어가 있고, 30페이지 정도를 한일관계에 할애해 ‘일본과 한국 아이덴티티의 아시아 정치’란 도입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에 대한 시점은 비판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본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에 관해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쓰여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중에서도 내셔널 아이덴티티, 국가차원의 협애한 국민국가라는 프로세스의 내셔널리즘은 불가피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아시아인의 내셔널리즘 같은 것도 나올 것이고, 이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찾았을 때 국회 연설을 들면서 불교의 절대평등주의와 유교를 언급한 것 등을 인용하면서 국가라는 틀을 넘어선 새로운 아시아주의와 같은 것을 만들어 가는 것도 일본 역할의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도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의 균형을 생각할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저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를 세상에 제공해가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윙희 네, 이주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지영 선생님도 계시고, 박영준 선생님, 니시노 선생님, 그 다음에 고하리 선생님도 계신데요, 선생님 중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30초 정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롭게. 없으시면 제가 마이크를 다른 선생님께 넘기려고 하는데요.

네, 오코노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오코노기 마사오 방금 이원덕 선생님이 진보 내셔널리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얘기한 것과 약간 어긋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해명해두고자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반일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발전을 떠받친 보수·반공 내셔널리즘과는 다른 진보 내셔널리즘이 민주화 이후 한국에 등장해 유력해진 결과 두개의 내셔널리즘 사이에 이른바 ‘남남갈등’ 이 격화됩니다. 문 대통령도 ‘친일청산’ 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반일’ 은 아닙니다. 일본을 직접 거론하는 건 아니죠. 그보다는 국내 반대파에게 ‘친일’ 이라는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이게 정의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정쟁의 한 형태가 되는 건 한일관계에서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진보 내셔널리즘이 바로 반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김윙희 네, 오코노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포럼에 오디언스로서 게이오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한국 국민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강연자, 토론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투고에 대해서 한일 양국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답변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선생님들, 또 말씀의 기회를 더 드려야 하는데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Q&A 에서 나온 질문을 적절하게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나눠서 해주시는 걸로 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3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Q&A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들에 대한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당 선생님들께 넘겨서 듣는 시간을 갖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 부

질의응답

진행 : 김승배 (충남대학교 초빙교수)

폐회사 : 서재진 (미래인력연구원 원장)

[발언은 모국어]



김승배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가능한 한 Q&A(Zoom 웨비나)에서 나온 질문을 선생님들께 여쭙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원덕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는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측에 대한 분석으로,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변화 가운데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정치개혁에 의한 ‘관저중심으로의 제도변화’가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외교도 장기적 관점의 접근보다 국내 정치의 일환으로, 특히 일본에서 관저 중심 외교가 상당히 부상해 이게 한일간 충돌의 일상화 원인이 된 건 아닌가 라는 관저중심외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번째는 과거와 다르게 지금 한국정부의 ‘의도적인 반일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비판하면서도 그게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에 대해 한국의 젊은이들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변화가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원덕 예. 감사합니다. 90년대 이후의 일본이 어떤 변화를 했고, 그것이 한일관계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의 문제와 관련해서, 관저중심의 외교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요 정관관계에서 관저의 역할이 커진 점은 분명히 한일간의 정치적 충돌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일본의 변화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90년대 일본은 정치이념상으로 보면 가장 리버럴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90년대에 사실은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도 나왔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90년대 일본사람들은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화해지향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평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쪽의 목소리가 대단히 강했다고 봅니다. 그러던 일본이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상당히 변화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은 크게 보면 일본의 상대적 국력의 저하와 연결돼 있고, 한편으로는 일본 사회의

침체를 보여주는 여러가지 사건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때마침 중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이제는 아시아 질서가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게 패권적인 지위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위축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이러한 변화가 결국 일본의 정치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아마 여러 선생님들 다 인정하실 거 같은데, 90년대까지의 일본 정치는 사실은 자민당 내에서도 보면 게이세이카이(経世会) 고치카이(宏池会) 등의 비둘기파(리버럴한) 파벌이 중심이 된 정권이었던 것인데,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정권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민주당 정권 3년을 제외하면 ‘세이와카이(清和会)’ 말하자면 자민당 내에서 가장 매파(우파)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세력이 정권의 중추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관계의 악화 요인을 너무 한국 쪽에 포인트를 두고 분석하는 시각이 강한 것 같아서, 일부러 일본 쪽의 변수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도 한국 못지 않게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심리적인 측면에 주목해서 본다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일본 국민들의 국제적인 인식이 개방적인 측면보다는, 폐쇄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도 생겼고, 이러한 변화가 아베 정부의 장기정권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마침 아베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취했고, 외교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성외교로 나간 나머지 이것이 결국은 한일관계를 어렵게 하는 일본측의 팩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일본 내에서의 관저중심의 정책결정이 강해진 것과 한일관계의 변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훨씬 더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대변화가 한일관계에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이냐의 문제는 아마 고하리 선생님이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여러 선생님들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젊은이들의 인식을 보며,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전망적인 미래를 엿보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양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역시 한일관계의 고질적인 마찰이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건 기성세대들의 인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사실 성장하는 한국,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일본을 압도해오는 한국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측면이 대단히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편 한국의 경우에도 기성세대의 인식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일본의 리얼리티와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21세기 현재 일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한국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선진국의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성세대는 일본은 여전히 한국이 배워야 할 롤모델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세대간의 일본 인식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

해서 더 이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본의 리얼리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젊은이들은 일본에 대해서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더욱이 대일 콤플렉스에 기반한 과거사 요구에 그다지 강한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제반의 변화, 또 아까 오코노기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일본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로 한일관계를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점들을 고려해보면, 저는 세대교체가 진행된다면 될수록 한일관계도 좀 더 리얼리즘으로 돌아온다고 할까요, 역사인식과 관련한 혹은 감정적인 마찰은 상대적으로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일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배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코노기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한국사법에 관해서 ‘변화(특히 2000년대 이후)’ 를 판단할 때, ‘전통, 유교’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에 대한 겁니다. 질문해 주신 윤재언씨라는 분은 법조기자로서 한국에서 활약한 분인데요, 이 분이 볼 때 한국사법의 정치화는 어떤 의미에서 ‘미국화’ 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최근 한국 재판관 다수는 해외연수처로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일본이 아니라 역시 미국을 고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도적인 움직임은 한국 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정치 임명’ 이 됐고, 이는 미국의 이념과 가깝고 재판관도 그와 같은 정치적 의미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 사법을 ‘조선왕조 · 유교의 영향’ 혹은 단순히 ‘정의 · 여론에 좌우되는 포퓰리즘’ 이라 봐도 될지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오코노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오코노기 마사오 미국 사법의 영향이라는 건 아마도 말씀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큰 역할을 한 헌법재판소는 독일형이죠. 제 관찰로는 한국 민주화의 성과인 1987년 헌법개정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때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됐습니다. 민주화가 전통적인 정치문화를 부활시킨 건 아닐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통적인 사법문화에 관해 한일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본은 무가정치의 전통을 가진 나라고 이를 규율하는 근세의 대표적 법률로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 가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제1항목은 ‘흰화양성패(喧嘩兩成敗)’ 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쌍방이 처벌됩니다. 어느 쪽에 정의가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비이념적인 분쟁처리라 할까요? 분쟁처리에서 이념을 개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는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정치문화나 사법체계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요약하자면, 정치문화에 대해 일본에는 사법소극주의 전통이, 한국에는 사법적극주의 전통이 정착해있고, 이게 상호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사법을 포퓰리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승배 네, 감사드립니다. 니시노 선생님께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신 듯해서 여쭙 보고자 합니다.

니시노 준야 감사합니다. 아까 관저주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만 이원덕 선생님의 답변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관저주도가 한일관계 악화를 불러온 요인인가에 대해 예스&노라고 생각합니다. 관저주도 그 자체가 관계악화의 요인이라기보다는, 관저주도 속에서 누가 리더인지라는 리더십의 형태가 요인으로서는 더욱 크다고 봅니다.

90년대 이후 일본정치의 변화는 관저주도라 하는 내각기능의 강화, 즉 행정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이라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후자의 정치개혁 쪽이 한일관계 악화라는 관점에서 큰 영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원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파벌의 힘이 약해지고 간사장을 중심으로 한 당중앙집행부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 결과 중선거구제 시대와 달리 소선거구제에선 국회의원들이 당중앙의 공인을 받기 위해 외교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고 선거구 사정이나 국내정치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외교의 형태나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과거 한일의원연맹이 상당히 활발했었는데요, 한일 모두 국회의원이 선거마다 빈번하게 바뀌게 되고 네트워크도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관저주도라는 행정개혁보다 오히려 선거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 쪽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송배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한국의 외교노선에 대해 오코노기 선생님께 여쭙보고자 합니다. 오코노기 선생님은 앞서 한일관계는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역시 미중관계, 한국의 경우는 한미일 동맹보다 역시 대북정책, 그리고 중국노선에 대한 선택이 국익과 관련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코노기 마사오 저는 그 같은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쌍방의 정권이 정말로 지금 리스크를 무릅쓰고라도 한일관계개선을 향해 움직일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한국에서는 내년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으니 인기가 없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일본도 팬데믹이나 올림픽으로 정신이 없고 그 뒤에는 중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도저히 외교를 할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쌍방에게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건 아닐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송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덕 선생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통역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징용 피해자는 300명이니 300억원 정도라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원덕 맞습니다. 배상을 요하는 징용 피해자 수를 저는 300명 정도로 봅니다. 제 계산으로는 징용 보상 문제는, 사실은 문제해결을 어떻게 정의하냐, 디파인하느냐와 중요하게 결부돼 있다고 보는데요. 일본 정부 포함해서, 일본 국민들의 이해 중에 하나는, 일제시대 때,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소위 모든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배상 문제가 전면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의 일환으로 지금 징용문제가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데에서 징용문제가 이슈로 촉발된 것이지, 식민지 시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배상을 일본에게 추궁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징용문제를 다루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이 난 건수는 3건입니다. 3건의 연관된 피해자의 수는 약 30여명 정도고, 만약 액수,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5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법원에 1심, 2심, 3심 포함해서 계류돼 있는 징용 사건을 보면 정확히는 14건입니다. 14건의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에 연관돼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따져보면 약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중에, 14건의 소송 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즉 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건수와 인원수를 보면 약 300명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도 중요하지만 증거도 중요하거든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소송도 많이 있고. 200여명이 연관돼 있는 집단 소송의 경우를 보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건수와 사람수를 따지면 300여명이다. 그래서 저는 징용문제를 굳이 금액으로 따지자면 ‘300억원짜리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조사의 결과로 도출된 소위 강제 동원 징병, 징용자의 수는 약 21 만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103만명이라고 하는 설도 있죠. 만약에 그런 통계로 잡힌 모든 징용피해자들에 대해서 똑같은, 동일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징용문제는 21 조원의 문제, 혹은 100 조원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알기에, 한국의 어떤 국민들도, 한국 정부의 누구도, 징용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전면적인 배상을 다시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오코노기 선생님 걱정해주신 소위 좌파 내셔널리스트입니까, 아니면 진보적 내셔널리스트입니까, 그들의 일부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법적 배상을 일본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사람은 매우 소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해결의 정의를 대법원 판결, 기판결난 사건에 한정하면 54억원, 그리고 앞으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사건을 합치면 300억원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농담 비슷하게 많이 얘기합니다만, 54억원은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판결이 집행됐을 경우에 후속 소송이 줄을 이어 제기된다면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지 않겠냐는 논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시효를 보통 3년으로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용문제가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きりのない(끝이 없는)’ 형태로 징용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곤 보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징용판결, 현금화되고 있는 사안에 한정해서, 공은 이미 한국에 와 있다고 보는데, 한국 정부나 한국의 국회, 청구권 수혜기업 등등이 지혜를 내서 이 문제를 대위 변제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일본에게 사실상 식민지 관련 배상권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포기 선언을 하게 된다면 해결의 단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전에 우선 현금화

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유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손을 들었던 건 사실은 오코노기 선생님 말씀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미중전략 경쟁이 한일관계를 어렵게 하느냐,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미중전략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한국과 일본이 처한 전략적인 포지션은 점차 동일해진다고 봅니다. 고민의 정도차는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일간의 중국을 보는 눈, 미중 관계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둘러싼 약간의 견해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이 같등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전략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이 미중관계 속에서 너무나 공유하고 있는 이익이, 전략적인 이익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 끼여 있는 아시아태평양의 많은 나라들은 거의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시장을 무시할 수 없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략적으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중 같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관계에 협력의 모멘텀을 더 강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전략적인 인식의 차이, 또는 어프로치의 차이도, 저는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할 분담이라고 할까요,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북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 자체가, 북한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한일같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송배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지영 선생님에게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코멘트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관해 국민의 혐한인식을 자민당이 이용한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김지영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한일관계에 있어서 국내정치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예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두 국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차원적이다’, ‘고차원적이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양국가에 있어서 양국가 또는 민족간의 아이덴티티 같등이라는 것을 국가의 리더가 이용을 할 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아이덴티티 정치라고 하고, 상징정치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한국이 많은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덴티티 정치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러한 것이 또 일본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한 증거는 한국 신문보다 오히려 일본 신문에서 더 많이 발견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나 마이니치 신문에서 수출규제가 참의원선거 3일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자민당 당 고위에

있는 리더들이 ‘수출규제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를 선거에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는 인터뷰는 아주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문제라든지 아이덴티티 갈등을 국내 정치적인 것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직시를 하고, ‘이것이 한국의 문제다’ , ‘일본의 문제다’ 라고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송배 감사합니다. 지금 김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뭔가 의견 덧붙일 선생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심규선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김지영 선생님이 잘 말씀을 드렸는데, ‘협한 분위기를 정치가 이용한 거 아니냐’ 라는 데 그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저도 일본 정치인들한테 들은 말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정치인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지역구에서 흔쾌하게 칭찬받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니까 지역구에서 엄청난 칭찬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협한을 이용했다기보다는, 저는 거꾸로 봐서 ‘일본에도 국민이 있었다’ 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일본 국민, 유권자의 얘기를 이제는 일본 정치인이 무시하지 못하게 됐다 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더 쉽겠다, 협한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협한 분위기를 일본 정치인들이 이제 거부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데서 나온 것이 바로 정치인들 사이에 요새 한국을 돕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관여하지 말라 라는 소위 말해서 ‘비한3원칙’ 이 나온 것도 그런 배경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송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상 제3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김송배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의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고,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논의할 게 하면 할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 제약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음을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남은 논의도 이 한일아시아미래포럼에서 이어받아서 지속적으로 한일관계의 개선과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부까지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로 참여해주신 오코노기 선생님, 이원덕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오디언스로서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시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3부까지 행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공최자인 미래인력연구원의 서재진 원장님으로부터 폐회사, 폐회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서재진 네, 안녕하세요, 서재진입니다. 원래 이 회의의 한국측 대표는 이진규 선생님이신데, 오늘 코로나 백신을 맞고 몸이 불편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이원덕 선생님, 오코노기 마사오 선생님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친 여러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대안들을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원덕 교수님께서서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잘 분석을 해 주셨고, 특히 한일관계 악화 요인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국력의 차이에 의해서 일본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이런 것에도 영향이 있다, 제가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한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코노기 마사오 선생님은 제가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연구를 할 때 자주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걸 오랜만에 듣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코노기 선생님께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책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인류 역사는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500페이지가 넘는 그 긴 책에서 역사를 이 하나의 개념으로 딱 정리했을 적에 긴가민가했었는데, 사실 우리 개인으로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로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한일관계의 이런 갈등은, 결국은 한국은 일본을 잘 존중하지 않고, 또 일본도 한국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전략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자들은 특히 감정 문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코노기 마사오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새삼스럽게 느끼게 돼서 상당히 우리가 경청해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토론해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보완적으로 좋은 분석과 대책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마니시상께서 지도하시는 아즈미재단과 미래인력연구원이 공동학술회의를 하면서 한일의 문제에 대해서 참 의미있고 성과가 있는 좋은 회의였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많은 지혜를 함께 공유하신 참여자 여러분들께 함께 기뻐하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미나는 오늘이 19번째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지속돼서 정부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갈등 있는 것들을,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원인과 대책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 역할을 이 두 기관이 계속해서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폐회의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김용희 서재진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후기를 대신하여

김응희 인하대학교 교수

2021년 5월 29일(토), 제19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이 성황리에 끝났다. 본래는 2020년 3월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중지돼, Zoom 웨비나 형식으로 실시하게 됐다.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온택트’ (ON-TACT: 한국사회에서 퍼진 말. 비대면을 가리키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외부 활동을 계속하는 방식을 가리킴)로, 적극적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힘써온 SGRA의 선도 하에 개최하게 됐다.

한일관계는 미일 정부교체, 한국 법원의 전례와 다른 판결 등으로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면서도 좀처럼 접점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상타파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한일관계 연구자는 무엇이 가능할까? 본 포럼에서는 한일관계 전문가를, 한일 각각 4명씩 불러 ‘기로에 선 한일관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시도했다.

포럼은 SGRA 이마니시 준코 대표의 개회인사에 이어, 일본과 한국에서 2명의 전문가가 기조 보고를 했다. 우선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는 ‘한일관계의 현단계-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향후 정치일정을 생각하면 한일관계를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건 용이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아이덴티티의 탄생과 한일의 세대교체가 상호관계의 불행한 역사를 청산할 촉매제가 될 것으로 봤다. 바이든 정권 출범으로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자로 삼고, 동맹국과 우호국에 단결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대립 사이에 낀 한일양국의 전략공유는 한일 상호이미지를 개선하고, 광범위한 인식공유를 선도할 것으로 봤다.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재확인 이 당면의 목표인 점도 강조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기로에 선 한일관계: 무엇을 할 것인가-한국의 입장’에 대해 보고했다. 한일관계는 공수전환으로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역전 현상이 눈에 띄게 됐다고 진단하며, 미중전략경쟁이 격화될 한중일은 다층적이며 다차원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대중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한 국익 계산과 철저한 전략적 사고로 대일외교를 정립해야 하고, 그 기반은 일본의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티를 올바르게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징용공문제’에 대해선, 4가지 선택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1은 방치(현상유지), 시나리오2는 대위변제(기금설립)에 의한 해결, 시나리오3은 사법적 해결(국제사법재판

소), 시나리오4는 정치적 결단(배상포기 및 김영삼 방식)으로, 그 가운데 시나리오4가 적절한 길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정토론에 들어가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오코노기 교수의 발표에 대해, 양국관계를 외부적인 요인이나 과거 사례를 토대로 개선할 것이 아니라, 양국 내부 의사와 미래 비전 공유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 결국 국민의 자각과 설득, 리더와 정계의 열린 태도, 국제적 인식 공유 등으로 귀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교수 발표에 대해선 이주인 아츠시 일본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서방 선진국으로 전면적인 ‘대중 대연합(對中大連合)’을 구축하는 건 용이하지 않고, 안보, 기술, 공급망, 인권 등 개별 주제마다 주문제작이나 특정목적의 연대를 조직하는 게 현실적이고, 한일도 그와 같은 노력을 이용하며 전략공유를 피하면 어떻게 코멘트했다.

제2부 자유토론에서 김지영 한양대 부교수는 현실적으로 한일 복합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는 당면한 징용공, 위안부 문제의 수습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한 뒤, 스가 정권에서 한국에 대한 사죄나 유연한 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전향적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는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에서도 ‘리얼리즘과 이상주의’의 균형이 필요하고 ‘코로나와 인적 왕래의 전면 중단’이라는 상황에서 쌍방의 직접체험이 아닌 ‘머릿속에서 그려진 사회’하의 의사환경(疑似環境)에 기반해,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해, 온라인 대화 촉진 등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는 일본과 한국 모두 상대국 리더 언동만으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나, 상대방의 사회가 다양하다는 당연한 사실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상대방이 어떤 국제질서인식을 갖고 있고, 그에 기반해 어떤 전략과 정책을 전개하려 하는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한일 양국정부는 관계를 ‘관리’하면서 ‘복원’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보다 자각적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는 한국정부가 ‘화해치유재단’해산 결정을 재검토해, 이를 일본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한일협력은 한국이 원하는 외교안전보장 전략적 목표 달성에 불가결하다고 했다.

제3부에선, 김승배 충남대 초빙교수의 조력으로 웨비나 화면의 ‘Q&A 기능’을 사용해 일반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번엔 100명을 넘어서는 일반참가자 참가신청이 있었다. 게이오대, 시즈오카현립대, 국민대 학생의 참가도 많았다. 시간 제약이 있어 충분한 질의응답 기회가 있었다고 하긴 어려우나, 20년이나 계속돼 온 한일아시아미래포럼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해, 특히 양국 젊은 세대가 동시접속했다는 점은 특기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서재진 미래인력연구원장의 오코노기 교수와의 긴 시간의 학문적 교류에 대한 언급과 폐회사로 마무리 지어졌다. 본래 이것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회의 초반부 생각지 못한 음향 트러블로 20분 정도 늦어져 개회인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니시 대표가 재등장해 상황 설명과 함께 마

무리했다. 이번은 아쉽게도 코로나로 한일아시아미래포럼이 자랑하는 ‘광란의 밤’ 이 재현되지 않았으나, ‘광란’ 의 하울링은 다음 번 교류모임을 예고하는 것임에 틀림없으리라.

온라인 반성회도 이뤄졌으나 주로 본 포럼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후는 연구자에 한정 짓지 않고 많은 관계자와의 논의, 그리고 한일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일반인들과의 대화가 가능한 포맷에 대해 고민해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제19회째 포럼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마니시 대표와 이진규 전 이사장(함경북도지사), 그리고 훌륭한 웨비나 준비에 만전을 기한 스태프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자 한다.

(SGRA 이벤트 보고 2021. 06. 20 / 김웅희 ‘제 19 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 ‘기로에 선 한일관계 :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고’ 를 옮겨옴)

■ 김웅희

89 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 94 년 , 츠쿠바대학 대학원 국제정치경제학연구과 석사 , 98 년 박사 . 박사논문 ‘동의조달의 침투성 네트워크로서의 정부자문기관에 관한 연구’ . 99 년 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임연구원 . 00 년부터 한국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전임강사 . 06 년부터 부교수 , 11 년부터 교수 . SGRA 연구원 . 대표저작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정책이전과 확산』 , 공저 , 사회평론 , 2012 년 ; 『현대일본정치의 이해』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새로운 동아시아 물류루트 개발을 위한 일본의 국가전략」 『일본연구논총』 제 34 호 , 2011 년 . 최근엔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 동아시아에서의 한일이 협력해 어떻게 국제 공공재를 제공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참가자 약력

■ 오코노기 마사오 【小此木政夫】 OKONOGI Masao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1945년생. 한일포럼 일본측 좌장. 전문은 국제정치론 및 한국·북한정치론. 게이오기주쿠대학원 재학중에 연세대학교에 교환유학(1972-74).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교수(1985년). 법학박사. 게이오기주쿠대학 지역연구센터 소장, 법학부장을 역임. 한일공동연구포럼 일본측 좌장(1996-2005년), 제1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일본측 간사(2002-05년), 한일신시대공동연구 프로젝트 일본측 위원장(2009-13년) 등을 역임했다. 규슈대학 특임교수(2011-14년). 저서에 『朝鮮戦争(조선전쟁)』(1986년), 『朝鮮分断の起源(조선분단의 기원)』(2018년), 편저에 『ポスト冷戦の朝鮮半島(포스트 냉전의 한반도)』 등. 대한민국수교훈장 수상(2020년).

■ 이원덕 【李元德】 LEE, Won Deog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도쿄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취득. 1998년부터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학연구소장을 역임. 『일본공간』 편집자.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통, 동북아시아역사재단 등의 자문위원을 역임. 전문분야는 일본의 정치외교, 북동아시아 국제관계. 특히 한일관계 및 한일외교사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 관심을 갖고 있음. 저서에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단저), 『한일관계사 1965-2015 정치』(공편) 등.

■ 이쥬인 아츠시 【伊集院敦】 IJUN Atsushi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니혼게이지아이신문사에 입사해 서울지국장, 정치부 차장, 중국총국장, 편집위원 등을 거쳐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아시아 연구를 담당. 전문은 중국·한반도의 정치·경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경제안전보장. 근간으로 『技術覇権 米中激突の深層(기술패권 미중격돌의 심층)』(공편저, 니혼게이지아이신문출판사, 2020년), 『変わる北東アジアの経済地図-新秩序への連携と競争-(바뀌는 북동아시아 경제지도-신질서로의 연계와 경쟁-)』(편저, 분신도, 2017년) 등. 6월에 『米中分断の虚実(미중분단의 허실)』(공편저, 닛케이 BP 니혼게이지아이신문출판본부), 『金正恩時代の北朝鮮経済(김정은시대의 북한경제)』(편저, 분신도) 출판.

■ 심규선 【沈揆先】 SHIM, Kyu-Sun

1956년 생,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1983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도쿄특파원·지국장, 정치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실장, 大記者(상무) 등을 역임. 또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초빙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기금교수, 세종연구소 이사, 화해치유재단 이사 등도 지냈다. 현재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한일포럼 운영위원, 국민대 일본학과 강사로 일하고 있다. 일본 관련 저서로 『일본을 쓰다』(2017) 《조선통신사 한국 속 오늘》(2017) 《한일관계 막후 60년 최서면에게 듣다》(번역·2020) 《위안부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2021) 등이 있다.

■ 김지영 【金志英】 KIM, Ji Young

현직 : 한양대 (ERICA) 일본학과 부교수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사 서울대학교 정치학석사
 University of Delaware 정치학박사

주요경력

2018- 현재 : 한양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2016-2018 : 도쿄대학교 종합문화연구과 지역문화연구전
 공 준교수
 2014-2016 : 도쿄대학교 종합문화연구과 지역문화연구전
 공 전임강사
 2012-2014 : 일본 학술진흥회 (JSPS) 박사후 연구원, 도쿄
 대학교 대학원 정보학환

최근연구성과

Wenxin Li & Ji Young Kim (2020), "Not a blood alliance anymore? China's evolving policy toward UN sanctions on North Korea."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Sam Samuels & Ji Young Kim (2019), "Identity Politics and Asia-Pacific Security Relations: Understanding Foundation of Australia-Japan versus Japan-South Korea Defense Relations." International Politics.

Yun Yu & Ji Young Kim (2018), "The Stability of Proximity: The Resilience of Sino-Japanese Relations Over the Senkaku/Diaoyu Disput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Ji Young Kim & Jeyong Sohn (2017), "International Pressure, Domestic Backlash, and the Comfort Women Issue in Japan" Pacific Affairs 90 (1).

■ 고히리 스스무 【小針進】 KOHARI Susumu

1963년 치바현 출생. 도쿄외국어대학 조선어과 졸업, 한국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중퇴. 특수법인 국제관광진흥회 (현 일본 정부관광국) 직원, 외무성 전문조사원 (재한일본대사관 정치부) 등을 거쳐, 시즈오카현립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현대 한국의 사회·문화·정치의 상호관계, 한일간 상호인식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국의 중요인물에 대한 구술사 작업도 진행하고 있음. 공익재단법인 한일문화교류기금이사, 게이오기주쿠대학 비상근강사. 저서에 『日中韓の相互イメージとポピュラー文化 (한중일 상호이미지와 대중문화)』, 『日韓関係の争点 (한일관계의 쟁점)』 (공편저), 『日韓交流スクランブル-各界最前線インタビュー (한일교류스크램블-각계 최전선 인터뷰)』, 『韓国人は、こう考えている (한국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등.

■ 박영준 【朴榮濬】 PARK, Young-June

2002년 동경대학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
 2003.3- 현재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교수
 2009.2- 2013.2 한일신시대공동연구위원회 위원
 2018.1-2018.12, 현대일본학회 회장

■ 니시노 준야 【西野純也】 NISHINO Junya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 동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장.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동대학원 법학연구과 정치학전공 석사과정 졸업, 동박사과정 학점취득퇴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졸업 (정치학 박사). 하버드 옌칭연구소, 조지워싱턴대학 시거 센터,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 전문은 동아시아 국제정치, 현대한국정치, 한일관계. 공편저에 『韓国における市民意識の動態Ⅱ (한국의 시민의식 동태Ⅱ)』, 『転換期の東アジアと北朝鮮問題 (전환기의 동아시아와 북한문제)』, 『朝鮮半島の秩序再編 (한반도의 질서재편)』 (모두 게이오기주쿠대학출판회) 등.

SGRA レポート バックナンバーのご案内

- SGRA レポート01 設立記念講演録 「21世紀の日本とアジア」 船橋洋一 2001. 1. 30発行
- SGRA レポート02 CISV国際シンポジウ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への挑戦：多様性の中に調和を求めて」
今西淳子、高 偉俊、F. マキト、金 雄熙、李 來賛 2001. 1. 15発行
- SGRA レポート0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技術の創造」 畑村洋太郎 2001. 3. 15発行
- SGRA レポート04 第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の皆さんへ」 関 啓子、L. ビッヒラー、高 熙卓 2001. 5. 10発行
- SGRA レポート05 第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の新しい東アジア：経済協力をどう考えるべきか」
平川 均、F. マキト、李 鋼哲 2001. 5. 10発行
- SGRA レポート06 投稿 「今日の留学」「はじめの一歩」 工藤正司 今西淳子 2001. 8. 30発行
- SGRA レポート07 第3回フォーラム講演録 「共生時代のエネルギーを考える：ライフスタイルからの工夫」
木村建一、D. バート、高 偉俊 2001. 10. 10発行
- SGRA レポート08 第4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 教育革命：ITは教育をどう変えるか」
白井建彦、西野篤夫、V. コストブ、F. マキト、J. スリスマンティオ、蔣 恵玲、楊 接期、
李 來賛、斎藤信男 2002. 1. 20発行
- SGRA レポート09 第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と民族主義：対話と共生をキーワードに」
ペマ・ギャルポ、林 泉忠 2002. 2. 28発行
- SGRA レポート10 第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とイスラーム：文明間の対話のために」
S. ギュレチ、板垣雄三 2002. 6. 15発行
- SGRA レポート11 投稿 「中国はなぜWTOに加盟したのか」 金香海 2002. 7. 8発行
- SGRA レポート12 第7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環境診断：地球の砂漠化を考える」
建石隆太郎、B. プレンサイン 2002. 10. 25発行
- SGRA レポート13 投稿 「経済特区：フィリピンの視点から」 F. マキト 2002. 12. 12発行
- SGRA レポート14 第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中の新しい東アジア」 +宮澤喜一元総理大臣をお迎えして
フリーディスカッション
平川 均、李 鎮奎、ガト・アルヤ・ブートゥラ、孟 健軍、B. ヴィリエガス 日本語版2003. 1. 31発行、
韓国語版2003. 3. 31 発行、中国語版2003. 5. 30発行、英語版2003. 3. 6発行
- SGRA レポート15 投稿 「中国における行政訴訟—請求と処理状況に対する考察—」 呉東鎬 2003. 1. 31発行
- SGRA レポート16 第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情報化と教育」 苑 復傑、遊間和子 2003. 5. 30発行
- SGRA レポート17 第10回フォーラム講演録 「21世紀の世界安全保障と東アジア」
白石 隆、南 基正、李 恩民、村田晃嗣 日本語版2003. 3. 30発行、英語版2003. 6. 6発行

- SGRA レポート 18 第1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研究：国境を越える取り組み」 高橋 甫、貫戸朋子 2003. 8.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19 投稿 「海軍の誕生と近代日本－幕末期海軍建設の再検討と『海軍革命』の仮説」 朴 栄濬
2003. 12. 4 発行
- SGRA レポート 20 第12回フォーラム講演録 「環境問題と国際協力：COP3の目標は実現可能か」
外岡豊、李海峰、鄭成春、高偉俊 2004. 3.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21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アジア共同体構築に向けての日本及び韓国の役割について」 2004. 6.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22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民族紛争－どうして起こるのか どう解決するか」 明石康 2004.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23 第1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宮島喬、イコ・プラムティオノ 200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24 投稿 「1945年のモンゴル人民共和国の中国に対する援助：その評価の歴史」 フスレ 2004.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25 第14回フォーラム講演録 「国境を越えるE-Learning」
斎藤信男、福田収一、渡辺吉裕、F. マキト、金 雄熙 2005. 3. 31 発行
- SGRA レポート 26 第1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この夏、東京の電気は大丈夫？」 中上英俊、高 偉俊 2005. 1. 24 発行
- SGRA レポート 27 第1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軍事同盟の過去・現在・未来」
竹田いさみ、R. エルドリッチ、朴 栄濬、渡辺 剛、伊藤裕子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28 第17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地球市民の義務教育-」
宮島 喬、ヤマグチ・アナ・エリーザ、朴 校熙、小林宏美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29 第18回フォーラム・第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韓流・日流：東アジア地域協力における
ソフトパワー」 李 鎮奎、林 夏生、金 智龍、道上尚史、木宮正史、李 元徳、金 雄熙 2005. 5.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0 第1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文化再考－自由と市民社会をキーワードに－」
宮崎法子、東島 誠 2005. 1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1 第2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雁はまだ飛んでいるか」
平川 均、渡辺利夫、トラン・ヴァン・トウ、範 建亭、白 寅秀、エンクバヤル・シャグダル、F. マキト
2006. 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2 第21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留学生－」
横田雅弘、白石勝己、鄭仁豪、カンピラバープ・スネート、王雪萍、黒田一雄、大塚晶、徐向東、
角田英一 2006. 4.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3 第22回フォーラム講演録 「戦後和解プロセスの研究」 小菅信子、李 恩民 2006. 7.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4 第2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と宗教：宗教って何なの？」
島蘭 進、ノルマン・ハイヴンズ、ランジャナ・ムコパディヤヤ、ミラ・ゾンターク、
セリム・ユジェル・ギュレチ 200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5 第24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ごみ処理と国境を越える資源循環～私が分別したごみはどこへ行くの？～」
鈴木進一、間宮 尚、李 海峰、中西 徹、外岡 豊 2007. 3.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6 第25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は教育を強化できるか」
高橋富士信、藤谷哲、楊接期、江蘇蘇 2007.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7 第1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若者の未来と日本語』」
池崎美代子、武田春仁、張 潤北、徐 向東、孫 建軍、朴 貞姫 2007. 6.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8 第6回日韓フォーラム in 葉山講演録 「親日・反日・克日：多様化する韓国の対日観」
金 範洙、趙 寛子、玄 大松、小針 進、南 基正 2007. 8. 31 発行
- SGRA レポート39 第2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思想史～私たちの出会いと将来～」
黒住 真、韓 東育、趙 寛子、林 少陽、孫 軍悦 2007.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40 第27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アジアにおける外来種問題～ひとの生活との関わりを考える～」
多紀保彦、加納光樹、プラチヤー・ムシカシントン、今西淳子 2008.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41 第2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いのちの尊厳と宗教の役割」
島蘭進、秋葉悦子、井上ウイマラ、大谷いづみ、ランジャナ・ムコパディヤヤ 2008.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42 第2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新疆講演録 「黄土高原緑化協力の15年—無理解と失敗から
相互理解と信頼へ—」 高見邦雄 日本語版、中国語版 2008.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4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主義」 平川均 2008. 3. 1 発行
- SGRA レポート44 第29回フォーラム講演録 「広告と社会の複雑な関係」 関沢 英彦、徐 向東、オリガ・ホメンコ
2008. 6. 25 発行
- SGRA レポート45 第3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教育における『負け組』をどう考えるか～
日本、中国、シンガポール～」 佐藤香、山口真美、シム・チュン・キャット 2008.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46 第31回フォーラム講演録 「水田から油田へ：日本のエネルギー供給、食糧安全と地域の活性化」
東城清秀、田村啓二、外岡 豊 2009.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47 第3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オリンピックと東アジアの平和繁栄」
清水 諭、池田慎太郎、朴 榮濬、劉傑、南 基正 2008. 8. 8 発行
- SGRA レポート48 第3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延辺&北京講演録 「一燈やがて万燈となる如く—
アジアの留学生と生活を共にした協会の50年」 工藤正司 日本語版、中国語版 2009. 4.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49 第3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が格差を縮めるか」
東 茂樹、平川 均、ド・マン・ホーン、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09. 6.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0 第8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日韓の東アジア地域構想と中国観」
平川 均、孫 洌、川島 真、金 湘培、李 鋼哲 日本語版、韓国語Web 版 2009.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51 第3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テレビゲームが子どもの成長に与える影響を考える」
大多和直樹、佐々木 敏、渋谷明子、ユ・ティ・ルイン、江 蘇蘇 2009. 1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2 第3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市民社会と21世紀の課題」
宮島 喬、都築 勉、高 熙卓、中西 徹、林 泉忠、プ・ティ・ミン・チイ、
劉 傑、孫 軍悦 2010. 3.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53 第4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上海講演録 「世界的課題に向けていま若者ができること〜
TABLE FOR TWO 〜」近藤正晃ジェームス 2010. 4.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4 第37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エリート教育は国に『希望』をもたらすか：
東アジアのエリート高校教育の現状と課題」玄田有史 シム・チュンキャット
金 範洙 張 健 2010.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5 第38回フォーラム講演録 「Better City, Better Life ～東アジアにおける都市・
建築のエネルギー事情とライフスタイル～」木村建一、高 偉俊、
Mochamad Donny Koerniawan、Max Maquito、Pham Van Quan、
葉 文昌、Supreedee Rittironk、郭 榮珠、王 劍宏、福田展淳 2010. 1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6 第5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中国の環境問題と日中間協力」
第一部（北京）：「北京の水問題を中心に」高見邦雄、汪 敏、張 昌玉
第二部（フフホト）：「地下資源開発を中心に」高見邦雄、オンドロナ、ブレンサイン
201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7 第39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ポスト社会主義時代における宗教の復興」井上まどか、
ティムール・ダダバエフ、ゾンターク・ミラ、エリック・シッケタンツ、島 蘭 進、陳 継東
2011. 12.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8 投稿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論への一試論」平川 均 2011. 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9 第10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1300年前の東アジア地域交流」
朴 亨國、金 尚泰、胡 潔、李 成制、陸 載和、清水重敦、林 慶澤 2012.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60 第40回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の少子高齢化問題と福祉」
田多英範、李 蓮花、羅 仁淑、平川 均、シム・チュンキャット、F・マキト 2011.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61 第4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共同体の現状と展望」恒川恵市、黒柳米司、朴 榮濬、
劉 傑、林 泉忠、ブレンサイン、李 成日、南 基正、平川 均 2012.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62 第6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Sound Economy ～私がミナマタから学んだこと～」 柳田耕一
「内モンゴル草原の生態系：鉱山採掘がもたらしている生態系破壊と環境汚染問題」 郭 偉
201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64 第43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東アジア軍事同盟の課題と展望」
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南 基正、林 泉忠、竹田いさみ 2012.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65 第44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21世紀型学力を育むフューチャースクールの戦略と課題」
赤堀侃司、影戸誠、曹圭福、シム・チュンキャット、石澤紀雄 2013. 2. 1 発行
- SGRA レポート66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日英戦後和解（1994-1998年）」（日本語・英語・中国語） 沼田貞昭
2013.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67 第12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太平洋時代における東アジア新秩序の模索」
平川 均、加茂具樹、金 雄熙、木宮正史、李 元徳、金 敬黙 201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68 第7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ボランティア・志願者論」
（日本語・中国語・英語） 宮崎幸雄 2014. 5. 15 発行
- SGRA レポート69 第45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紛争の海から平和の海へー東アジア海洋秩序の現状と展望ー」
村瀬信也、南 基正、李 成日、林 泉忠、福原裕二、朴 榮濬 2014.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70 第46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インクルーシブ教育：子どもの多様なニーズにどう応えるか」
荒川 智、上原芳枝、ヴィラーク ヴィクトル、中村ノーマン、崔 佳英 2015.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71 第47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科学技術とリスク社会ー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考える科学技術と倫理ー」
崔 勝媛、島藺 進、平川秀幸 2015. 5. 25 発行
- SGRA レポート72 第8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近代日本美術史と近代中国」
佐藤道信、木田拓也 2015.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73 第1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第48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経済のダイナミズムー物流を中心に」
李 鎮奎、金 雄熙、榎原英資、安 秉民、ドマン ホーン、李 鋼哲 2015.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74 第49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円卓会議「日本研究の新しいパラダイムを求めて」
劉 傑、平野健一郎、南 基正 他15名 2016. 6. 20 発行
- SGRA レポート75 第50回SGRAフォーラム in 北九州講演録「青空、水、くらしー環境と女性と未来に向けて」
神崎智子、斉藤淳子、李 允淑、小林直子、田村慶子 2016. 6. 27 発行
- SGRA レポート76 第9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フフホト&北京講演録「日中200年ー文化史からの再検討」
劉 建輝 2020.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77 第15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これからの日韓の国際開発協力ー共進化アーキテクチャの模索」
孫赫相、深川由紀子、平川均、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1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78 第5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今、再び平和について—平和のための東アジア知識人連帯を考える—」
南基正、木宮正史、朴栄濬、宋均營、林泉忠、都築勉 2017. 3. 27 発行
- SGRA レポート79 第52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
劉傑、趙琬、葛兆光、三谷博、八百啓介、橋本雄、松田麻美子、徐静波、鄭淳一、金キョンテ
2017.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80 第16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韓の国際開発協力—新たなアジア型モデルの模索—」
金雄熙、李恩民、孫赫相、李鋼哲 2017. 5. 16 発行
- SGRA レポート81 第56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人を幸せにするロボット—人とロボットの共生社会をめざして第2回—」
稲葉雅幸、李周浩、文景楠、瀬戸文美 2017.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82 第57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第2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蒙古襲来と13世紀モンゴル帝国のグローバル化」
葛兆光、四日市康博、チョグト、橋本雄、エルデニバートル、向正樹、孫衛国、金甫枕、李命美、ツェレンドルジ、趙阮、張佳 2018.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83 第58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を結ぶ? 『一带一路』の地政学」
朱建榮、李彦銘、朴栄濬、古賀慶、朴准儀 2018. 11. 16 発行
- SGRA レポート84 第11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からみた中国美術史学」
塚本磨充、呉孟晋 2019. 5. 17 発行
- SGRA レポート85 第17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北朝鮮開発協力：各アクターから現状と今後を聞く」
孫赫相、朱建榮、文炅鍊 2019. 11. 22 発行
- SGRA レポート86 第59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第3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7世紀東アジアの国際関係—戦乱から安定へ—」
三谷博、劉傑、趙琬、崔永昌、鄭潔西、荒木和憲、許泰玖、鈴木開、祁美琴、牧原成征、崔姪姫、趙軼峰 2019.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87 第6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の高等教育のグローバル化!?!」
沈雨香、吉田文、シン・ジョンチョル、関沢和泉、ムラット・チャクル、金範洙 2019. 3. 26 発行
- SGRA レポート88 第12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映画交流の可能性」
刈間文俊、王衆一 2020.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89 第62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再生可能エネルギーが世界を変える時…? —不都合な真実を超えて」
ルウェリン・ヒューズ、ハンス＝ヨゼフ・フェル、朴准儀、高偉俊、葉文昌、佐藤健太、近藤恵
2019. 11. 1 発行
- SGRA レポート90 第63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第4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東アジア』の誕生—19世紀における国際秩序の転換—」
三谷博、大久保健晴、韓承勳、孫青、大川真、南基玄、郭衛東、塩出浩之、韓成敏、秦方 2020.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91 第13回SGRA-Vカフェ講演録「ポスト・コロナ時代の東アジア」
林 泉忠 2020.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92 第13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国際日本学としてのアニメ研究」大塚英志、秦 剛、古市雅子、陳 夔 2021.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93 第14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西思想の接触圏としての日本近代美術史再考」稲賀繁美、劉 曉峰、塚本磨充、王 中忱、林 少陽 2021.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94 第65回SGRA-Vフォーラム講演録「第5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9世紀東アジアにおける感染症の流行と社会的対応」朴 漢珉、市川智生、余 新忠 2021. 10. 05 発行

■ レポートご希望の方は、SGRA 事務局（Tel：03-3943-7612 Email：sgra@aisf.or.jp）へご連絡ください。

SGRA レポート No. 0095

第19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岐路に立つ日韓関係：これからどうすればいいか

제19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

기로에 선 한일관계：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編集・発行 (公財) 渥美国際交流財団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 (SGRA)
〒112-0014 東京都文京区関口3-5-8
Tel: 03-3943-7612 Fax: 03-3943-1512
SGRA ホームページ: <http://www.aisf.or.jp/sgra/>
電子メール: sgra@aisf.or.jp

発行日 2021年11月17日
発行責任者 今西淳子
翻訳 尹在彦
韓国語版監修 尹在彦
印刷 (株)平河工業社

©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 禁無断転載 本誌記事のお尋ねならびに引用の場合はご連絡ください。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 Copying is Prohibited. For inquiries or quotes, please contact us.

第19回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岐路に立つ日韓関係…これからどうすればいいか

